

내 삶을 바꾸는

문재인정부



사용설명서



대한민국정부

문재인정부는 국민 한분 한분이 삶의 전 영역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매 순간순간
질 높은 삶을 누리고, 성별·연령·소득·직업에 따라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부족한 부분을 더 꼼꼼히 살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을 더 촘촘히
채워 나가겠습니다.

이 책자는

대한민국 정책포털 '정책브리핑'(www.korea.kr)과
청와대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전자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minwon.go.kr, 전화 1588-2188)
에서도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문재인정부 사용설명서



차례

■ 전 생애에 걸쳐 높아진 삶의 질

1. 영유아·아동	06
2. 초·중·고등학생	08
3. 청년	11
4. 아이 키우며 일하는 엄마·아빠	15
5. 신(新)중년	16
6. 어르신	17

■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난 변화

1. 벤처·창업인	20
2. 소상공인·자영업자	23
3. 중소기업인	26
4. 직장인	29
5. 취업준비생	34
6. 여성	36
7. 장애인	38
8. 저소득층	40
9. 다양한 가족	42
10. 과학기술인	44
11. 농어업인	46
12. 문화예술인	48
13. 체육인	49
14. 소방관·경찰·군인·국가유공자	50

■ 국민 모두가 누리는 기분 좋은 변화

1.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었습니다.	56
2. 가계생계비가 대폭 경감되었습니다.	57
3. 일자리가 늘어나고 질이 좋아졌습니다.	60
4. 재해와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61
5. 누구나 어디서나 품격 있는 삶이 보장됩니다.	64
6. 보금자리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66
7. 미세먼지, 반드시 잡겠습니다.	67
8.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69
9. 세계가 대한민국을 인정합니다.	71

■ 부록 : 한국 경제 바로 알기



전 생애에 걸쳐 높아진 삶의 질

1. 영유아·아동
2. 초·중·고등학생
3. 청년
4. 아이 키우며 일하는 엄마·아빠
5. 신(新)중년
6. 어르신

01 | 영유아 · 아동

- ◆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과 돌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 ◆ 아동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 · 양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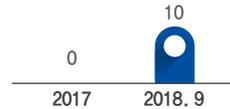
누리과정(만 3~5세)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 대상 보육료 및 학비 지원
 - * 어린이집 지원 : ('17년) 8,600억원(41.2%) → ('18년) 2조 586억원(100%)
→ ('19년) 1조 9,812억원(100%)
 - * 유치원 지원 : ('17년) 1조 8,533억원(100%) → ('18년) 1조 8,341억원(100%)
→ ('19년) 1조 7,628억원(100%)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액(만원) 〉

-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전체 269만명, '19.9월)
 - * ('18.9월) 소득 · 재산 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
→ ('19.1월) 소득 · 재산 요건 폐지 → ('19.9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가정에서의 양육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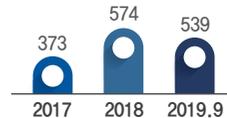
- 가정에서 양육되는 86개월 미만 아동 62만 4천명에게 가정양육수당 지급('19.9월)
 - * 지급금액 : (0~12개월 미만) 20만원 / (12~24개월 미만) 15만원 / (24~86개월 미만) 10만원

돌봄 · 교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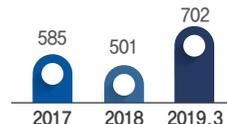
국공립 어린이집 · 유치원을 더 빨리 확충하겠습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 1,486개소 확충('17~'19.9월)
 - * ('17년) 373개소 → ('18년) 574개소 → ('19.9월) 539개소
- 국공립 유치원 1,788학급 확충('17~'19.3월)
 - * ('17년) 585학급 → ('18년) 501학급 → ('19.3월) 702학급

〈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개소) 〉



〈 국공립 유치원 신설(학급) 〉



돌봄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양육·보육 부담을 경감합니다.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 마련('18.4월), 온종일 초등돌봄교실 운영('17년 24.5만명→'18년 26.1만명 →'19년 29만명),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19.10월 105개소) 등 추진
* 학교돌봄 : '22년까지 34만명 / 마을돌봄 : '22년까지 19만명
- 어린이집 보육시간 개편 추진, 연장보육 시간 편성 및 전담 교사 배치 등으로 퇴근시간까지 충분한 보육시간 확보, 교사근무 여건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 기대
* 4개 시·군·구 시범사업 실시('19.5월~), '20.3월 시행 예정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 사립유치원 1,320개 에듀파인 회계 시스템 도입('19.3월)
* 200명 이상 1단계 도입대상 567개원 100% 도입 완료, 도입희망 사립유치원 753개원 도입
- 사립유치원 폐원 인가기준 및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원장 자격인정기준 상향
- 유치원 입학 온라인 원스톱 처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의무화('20학년도~)
* 원서접수·추첨·등록 등 입학절차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처리하여 입학단계에서의 공정성 강화 및 학부모 편의 제고

건강 지원

아동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10~20% → 5%, '17.10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입원시 본인부담금 없음, 외래 시 4만원 내) 및 난청 검사(입원 시 본인부담금 없음, 외래 시 9천원 내) 건강보험 적용('18.10월)
- 0세 아동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 인하(21~42% → 5~20%, '19.1월), 12세 이하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충치 치료) 건강보험 적용('19.1월)
* 0세 아동 평균 진료비 연간 약 11만원 경감(16.5만원 → 5.6만원, 66%)

어린이에게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18년)
* ('17년) 생후 6~59개월 이하 → ('18년)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02 | 초 · 중 · 고등학생

- ◆ 교육 전 과정에서 공정한 교육,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공정성 제고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습니다.

- 대입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전예고제(4년전 공표), 입학사정관 회피·배제 규정 신설(19.4월)
-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 * 정규교육과정 외의 활동 대입반영 폐지 및 자기소개서 폐지('24학년도 입시), 교사추천서 폐지('22학년도 입시) 교원의 기재역량 강화 및 불공정 기재에 대한 처분 강화, 출신고교 정보 블라인드 처리, 평가기준 공개 의무화, 평가에 외부인사 참관,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보존, 평가시간 및 전입사정관 참여 의무화 등 가이드라인 마련('21학년도 입시~)
-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논술 및 특기자 전형 지속 감축
 - * ('17학년도) 22,114명 → ('18학년도) 19,473명 → ('19학년도) 18,799명 → ('20학년도) 16,809명 → ('21학년도) 15,097명
-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3학년도 입시까지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추진('21학년도 대비 5,625명 증)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고른기회' 특별전형 확대 유도* 및 사회통합전형으로 법제화** 추진
 - * ('18학년도) 11.4% → ('19학년도) 12.4% → ('20학년도) 13.3% → ('21학년도) 13.7%
 - **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전형 10% 이상 의무화, 수도권 대학에 지역균형을 위한 전형 10% 이상 권고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과 대학 진학을 지원합니다.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1인당 300만원) 지원 확대
 - * ('18년) 24,000명 → ('19년) 25,000명
- 고졸 재직자 대학 진학 시 등록금 전액 지원 확대
 - * ('18년) 290억원 → ('19년) 580억원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전국단위 선발 일반고의 전국 모집 특례 폐지 추진
-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개인 맞춤형 교육 실천 (향후 약 2.2조원 예산 투입)

교육비 경감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로 고교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부담 경감

* 도입일정 : ('19년 하반기) 3학년 → ('20년) 2·3학년 → ('21년) 전 학년

* 지원사항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 및 소요자원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9.10월)

교육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부교재·학용품비 지원

* 초등 : ('17년) 4.12만 → ('18년) 11.6만 → ('19년) 20.3만

* 중·고 : ('17년) 9.53만 → ('18년) 16.2만 → ('19년) 29만

교육의 질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지속적으로 개선

* OECD 국가 평균 대비 격차 지속적 감소(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상회)

〈교사 1인당 학생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5	'16	'17	'18	'19	'15	'16	'17	'18	'19	'15	'16	'17	'18	'19
한국(A)	17.3	16.9	16.8	16.5	16.4	17.5	16.6	15.7	14.7	14.0	15.1	14.5	14.1	13.8	13.2
OECD 평균(B)	15.2	15.1	15.2	15.0	15.2	13.4	13.0	13.0	12.7	13.3	13.3	13.3	13.1	12.9	13.4
차이(A-B)	2.1	1.8	1.6	1.5	1.2	4.1	3.6	2.7	2.0	0.7	1.8	1.2	1.0	0.9	△0.2

출처 : Education at a Glance, OECD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 안팎에서 지원합니다.

- 기초학력보장 선도·시범학교(교실수업 내 보조인력 투입) 확대

* ('18년) 42개교 → ('19년) 74개교

- 두드림학교 다중지원팀(학교 내 담임·보건·상담·특수교사 등 참여) 구성·운영

* ('17년) 1,822개교 → ('18년) 2,720개교 → ('19년) 4,018개교

- 학교 밖 학습종합클리닉센터(학교 밖 교육청 및 외부 전문상담기관 등 연계지원)

* ('17년) 125개소 → ('18년) 118개소 → ('19년) 125개소

장애학생도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 특수학교(급) 확충 2개교 신설, 429학급 증설로 과밀 해소('17년 대비 3.7%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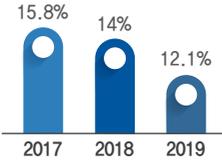
* ('17년) 15.8% → ('18년) 14% → ('19년) 12.1%

■ '20년 특수교사 역대 최대 규모(1,398명)로 증원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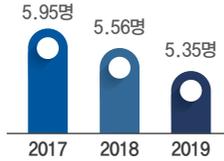
*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 : ('17년) 5.95명 → ('18년) 5.56명 → ('19년) 5.35명

*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 : ('17년) 67.2% → ('18년) 71.9% → ('19년) 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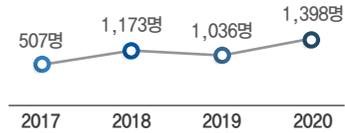
〈 과밀학급 비율 〉



〈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 〉



〈 특수교사 증원 현황 〉



학습 환경 개선 및 안전망 구축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합니다.

■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한 석면제거 및 내진 보강

* 석면건축물 포함 학교 : ('17년) 1만 2,202개교 → ('18년) 1만 765개교 → ('27년) 무석면학교 실현

* 내진 보강 : 경남·경북·울산 등 지진위험지역(~'24년), 그 외 지역(~'29년)

■ 학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

* ('17.6월 기준) 7만 1,634실(26.3%) 시범설치 → ('19.10월 기준) 23만 9,438실(87.9%) 설치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청소년 쉼터 : ('17년) 123개소 → ('19년) 134개소 / 청소년 동반자 : ('17년) 1,146명 → ('19년) 1,313명

■ 위기청소년 대상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

* ('17년) 약 256만건 → ('18년) 약 298만건으로 확대 실시

학교 밖 학생을 포용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확대(확진검사까지 지원)

* 수검인원 확대 : ('17년) 5,019명 → ('18년) 5,134명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누적) : ('17년) 202개소 → ('18년) 206개소 → ('19년) 214개소

■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 프로그램 운영

* ('17년) 자원근거 마련 → ('18년) 267개, 223명 등록 → ('19년) 477개, 467명 등록

03 |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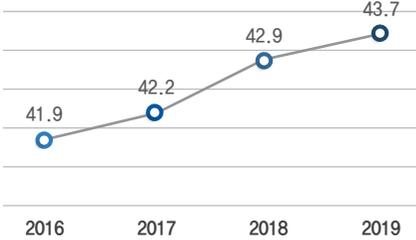
◆ 청년들의 일자리 · 주거 · 학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더욱 늘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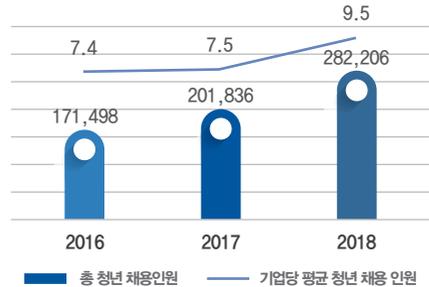
- 공공기관 :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 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
- 민간 부문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하여 중소 · 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3년간)
*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 증가('18년 수혜기업) :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
제도 시행 전('17년)은 전년 대비 1.5% ↑ (7.4 → 7.5명) / 제도 시행 후('18년)는 전년 대비 26.7% ↑

〈 청년 고용률(15~29세, %) 〉



※ '19.9월 기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활동 청년 채용인원 〉



청년들이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여 중소 ·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장기근속할 경우 자산형성을 지원
* 2년 근속 시 1,600만원(정부 900만원 지원), 3년 근속시 3,000만원(정부 1,800만원 지원)
* 지원인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 구직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19.3월)하여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지원
- 창업 :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통해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지원

주거

청년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택공급 :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 행복주택 70%, 매입·전세임대 30~50%
- 임차보증금 : 만34세·연소득 3.5천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및 한도 확대
* 융자 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 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
- 주택청약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설,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
* ('18년) 11만 7,164구좌 → ('19.9월) 24만 4,979구좌
- 전세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인하('18.9월, 2.3% → 1.8%)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18.7월)
* 매입, 전세임대 지원요건 완화(평균소득 7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15% → 30%)
*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대 :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예비부부
- 신혼부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확대 ('18.7월)
* (지원대상) 혼인 기간 5년 이내 → 7년 이내 및 예비부부
* (대출한도) 구입 시 : 2억원 → 2.4억원 / 전세대출 시 : 수도권 1.7억원 → 2억원, 지방 1.3억원 → 1.6억원

복지

청년들도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취업 20~30대 청년 등을 국가검진대상에 신규 포함하여 모든 청년에게 2년에 1회 무료 건강검진 실시 ('19.1월 시행, 약 719만명 수혜 예상)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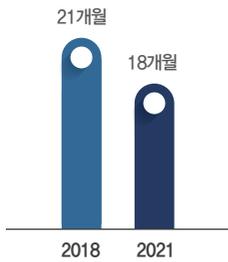
-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설('18.4월)하여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월평균 40만원의 근로 장려금과 소득공제액을 적립하여 목돈 마련 지원
* 소득인정액이 중위기준소득 30% 이하인 청년 생계급여수급자 대상, 3년 후 평균 1,422만원 목돈 마련

군 복무여건 개선

병 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여 한 학기 조기 복학이 가능해졌습니다.

- 청년들의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복무기간 3개월 단축
 - * (육군·해병대) 21 → 18개월 / (해군) 23 → 20개월 / (공군) 24 → 22개월
(공군은 추후 병역법 개정으로 1개월 추가 단축 추진 예정)
 - * '19.11.9일 전역일 기준 31일 단축('21.12.14일 완료)
-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최소화, 조기 사회진출 가능
 - * 복학 및 취업 시기 6개월(1학기) 단축이 가능하여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

〈 병사 복무기간 단축(육군 기준) 〉



〈 병사 봉급 인상(병장 기준) 〉



병사 봉급을 인상하여 전역 시 목돈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 병장 기준 : ('18년) 40만 5,700원 → ('20년) 54만 900원 → ('22년) 67만 6,100원
- 고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
 - * 5% 이상 금리, 비과세 혜택, 월 최대 40만원까지 적립 가능
 - * 전역 시 1학기 등록금 수준(400여만원)의 목돈 마련 가능('20년 입대인원 기준)

군 복무 중 대학 학점과 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모바일 웹 구축 등 수강여건 개선으로 참여병사 60% 증가
 - * 원격강좌 참여병사 : ('17년) 9,662명 → ('19년) 15,358명
-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제도 시행으로 학점취득 기회 확대
 - * '19.10월 현재 23개 대학 참여 확정,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등으로 참여대학 확대 예정
- '19년부터 여학·자격증 응시료, 학습 교재비 지원 등을 위해 병 개인별 5만원 내에서 자기개발비용 지원
 - * 1인당 지원한도 : ('19년) 5만원 → ('20년) 10만원 / 지원 예산 : ('19년) 20억원 → ('20년) 80억원

병사 휴대전화 사용 및 평일 외출 시행으로 가족·친구들과의 수시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시범운영 대상 전군으로 확대('19.4월)
 - * 통신사와 협의, 3만원대의 병사 전용 요금제 신설로 장병 부담 최소화
 - * 외부와의 소통(66% → 98%) 개선, 군 생활에 대한 우울·불안·소외감 감소
-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평일 일과 후 외출 시행('19.2월 전면시행)
 - * 일과 중 작전 및 교육훈련에 매진하고 일과 후 자기개발활동 및 충분한 휴식여건 보장
 - * 가족과 친구 면회, 병원 진료, 부대원 간 단결활동을 통해 전우애와 복무의욕 고취

학업

대학 등록금 및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 * ('18년) 국·공립대학 전면 폐지 → ('19~'21년) 사립대학 단계적 감축 → ('22년까지) 사립대학 완전 폐지
 - * 입학금 폐지 근거 마련(「고등교육법」 개정, '19.10월)
- 반값등록금(사립대학 평균 기준 50%, 368만원) 확대
 - * ('17년) 52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9만명
- 대학교 기숙사 수용인원 확대
 - * ('17년) 2만 2,718명 → ('18년) 2만 9,166명 → ('19.8월) 3만 6,612명
 - * ('19년) 기숙사 신규확충 : 7,446명

사회취약계층의 교육 희망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 취약계층 선발 확대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개정('18.5월)
 - * (비율) 5% 이상 → 7% 이상 / (범위) 경제적·신체적 →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취약계층
-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확대
 - * 예산 현황 : ('17년) 42억원 → ('18년) 47억원 → ('19년) 45억원

04 | 아이 키우며 일하는 엄마·아빠

◆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출산·육아기에는 부모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부모 육아 참여 확대

출산·육아기에는 부모 지원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수준 인상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40% → 80%(상한 100만원 → 150만원, '17.9월) / (4개월부터) 통상임금의 40% → 50%(상한 100만원 → 120만원, '19.1월)

■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인상('18년 월 상한 200만원 → '19년 250만원)

*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번갈아 사용 시 두 번째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 3일+무급 2일 → 유급 10일, '19.10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최대 2년까지 확대('19.10월)

양육·보육 지원

초등생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초등 돌봄교실 : 초등 돌봄교실 확충을 통한 돌봄공백 해소 및 학부모 양육부담 완화

* 돌봄교실 확충 : ('17년) 11,980실 → ('18년) 12,398실 → ('19년) 13,910실

* 돌봄교실 이용 학생 : ('17년) 24.5만명 → ('18년) 26.1만명 → ('19년) 29만명

■ 다함께 돌봄센터 :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맞춤형 돌봄 확대('19.10월, 105개소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과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지원시간 : ('17년) 연 480시간 → ('18년) 연 600시간 → ('19년) 연 720시간

* 지원대상 : ('18년) 중위소득 120% 이하 → ('19년) 중위소득 150% 이하

■ 아이돌보미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

* 시간당 급여 : ('18년) 7,800원 → ('19년) 9,650원(돌봄수당 8,400원 + 주휴수당)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저소득·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비를 각각 월 20만원, 35만원으로 인상('19년)

■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연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19년)

05 | 신(新)중년

- ◆ 新중년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고, 은퇴 후에도 제2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新중년 인생 3모작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용 안정

고령자고용지원금을 통해 고령자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 시(고용기간 1년 이상) 1인당 분기 27만원 지원('20년 30만원, '20년까지 한시지원)

재취업 지원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지원금 지원사유를 기존 사업주 중심에서 교육·훈련, 질병, 간병 등 근로자 개인사유도 포함하여 재취업 사전준비 지원
* ('17년) 사업주 경영방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 ('19년) 퇴직 준비 및 개인 사유(질병, 부상, 간병) 등 인정
* 지원현황 : ('17년) 604명 → ('18년) 849명 → ('19.10월) 3,703명

신중년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합니다.

- '20.5월부터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게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 대상 재취업서비스 제공 의무 부여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9.4월)

다양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인 신중년 적합직무를 74개('18.1월)에서 213개로 확대('19.2월)
* 예산 확대 : ('18년) 86억원 → ('19년) 273억원
* 지원인원 확대 : ('18년) 1,159명 → ('19.9월) 2,518명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이용자격을 50세 이상 재직자에서 40세 이상 재직자·구직자로 확대('18년)
* 서비스 이용자 수 : ('17년) 2만 3천명 → ('18년) 2만 8천명 → ('21년) 5만명까지 단계적 확대
-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개설
* 신중년 대상 숙련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6개월 장기과정 개설, 맞춤형 훈련 제공

사회참여 지원

퇴직자 사회공헌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퇴직인력이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회공헌 활동 시 수당 지급
* 참여 인원 : ('16년) 5,928명 → ('17년) 6,081명 → ('18년) 6,647명

06 | 어르신

◆ 어르신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소득 보장과 건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소득 · 일자리 지원

노인 기초연금과 통신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18.9월), 소득하위 20% 어르신은 월 최대 30만원 지급('19.4월)
-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비 월 최대 1만 1,000원 감면('18.7월)

〈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 〉



노인 일자리를 확충했습니다.

- 노인 일자리 지속 확충*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도입('19년, 월 60시간 / 59만원, 2만개)

* ('16년) 42만개 → ('17년) 47만개 → ('18년) 51만개 → ('19년) 64만개 → ('21년) 80만개 목표

* 참여 노인 88%가 '만족' 응답('18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의료 · 돌봄 지원

노인 의료 · 요양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17.11월) 및 치과 임플란트('18.7월) 본인부담률 인하(50% → 30%)
- 노인 장기요양보험 확대

*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대상 재가 · 시설 급여 및 가족요양비 등 지원 : ('18년) 67만명 → ('19년) 77만명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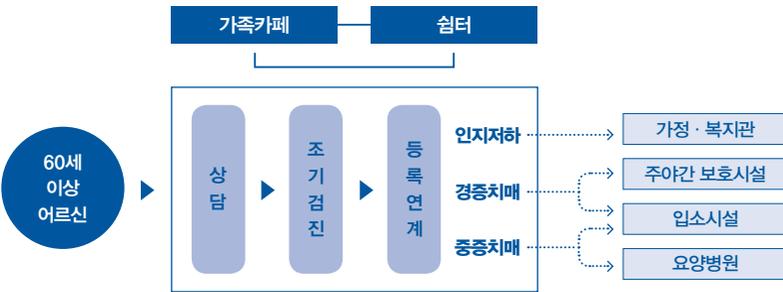
- 대상자 확대 : ('18년) 24만명 → ('19년) 29.5만명
- 종사자 확대 : ('18년) 9,600명 → ('19년) 11,800명
- 주 2회 전화, 주 1회 방문 등 안부 확인, 복지서비스 연계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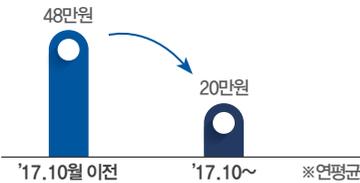
-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상담, 검진, 1:1 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326만명 이용('19.9월 기준)

〈 치매안심센터 업무흐름도 〉



-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본인부담률 10%로 인하, '17.10월),
치매 검사 비용 건강보험 적용(신경인지검사 : '17.10월 / MRI 검사 : '18.1월)

〈 중증치매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액 〉



-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 신설('18.1월)
-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 추진('20~'28년, 1,987억원 투입)
* 치매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등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난 변화

1. 벤처·창업인
2. 소상공인·자영업자
3. 중소기업인
4. 직장인
5. 취업준비생
6. 여성
7. 장애인
8. 저소득층
9. 다양한 가족
10. 과학기술인
11. 농어업인
12. 문화예술인
13. 체육인
14. 소방관·경찰·군인·국가유공자

01 | 벤처 · 창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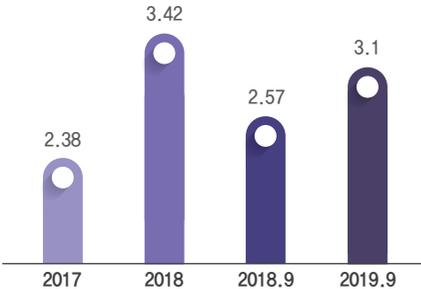
- ◆ 우리나라가 세계 4대 벤처강국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 규제에 가로막힌 신기술 · 서비스의 시장 출시와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2벤처 불 조성

벤처투자 금액, 신설법인 수, 유니콘기업 수가 사상 최대로 증가했습니다.

- '19년 벤처투자는 역대 최고치인 3.4조원을 넘어 4조원 전망
 - * 벤처투자 : ('15년) 2.1조원 → ('17년) 2.4조원 → ('18년) 3.4조원 → ('19.10월) 3.5조원 → ('19년) 4조원 예상
- '19년 신설법인 수는 지난해 10만개를 넘어 사상 최대 예상
 - * 신설법인 : ('03년) 5.3만개 → ('13년) 7.6만개 → ('18년) 10.2만개 → ('19.9월) 8.0만개 (전년동기 대비 4.2% ↑)
- 벤처기업 : ('00년) 0.9만개 → ('05년) 1만개 → ('10년) 2.5만개 → ('15년) 3.1만개 → ('19.8월) 3.7만개
-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1년 만에 3개사('18.7월)에서 9개사('19.6월)로 증가, 미국 · 중국 · 영국 등에 이어 국가별 유니콘 순위 6위 차지
 - * 유니콘기업('19.9월, CBInsights) : 미국(195개), 중국(99개), 영국(21개), 인도(19개), 독일(11개)

< 신규 벤처투자 금액(조원) >



* '18년도 신규 벤처투자 역대 최고치 달성
 * '19.1~9월 투자도 전년 동기 대비 20.6% 증가

< 국내 유니콘기업 수 >

* '18년도 3개 → '19년도 9월 9개



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창업-성장-재도전기에 있는 창업기업(2만개)에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4.3조원 지원

* '19년 정책자금 : (본예산) 3.6조원

→ (추경, 8월) 4.2조원 → (기금변경, 10월) 4.3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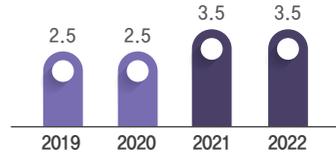
- '22년까지 스케일업 펀드 12조원 조성('19년 2.5조원) 통해 유망창업기업 도약지원

-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

10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100개 센터) 중소·벤처기업의 데이터 유통·활용을 위해 바우처 지원(1,640건)

〈스케일업 전용펀드 조성(조원)〉

* 혁신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4년간 12조원 규모 신규 조성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국내외 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공간으로 코리아스타트업(KSC) 등 해외 거점 조성

* 미국 시애틀('19.8월), 인도 구르가온('19.9월), 핀란드·스웨덴('19.6월 MOU → '20년 조성)

- 11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ComeUp」 개최('19.11월)

벤처기업의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판로를 지원했습니다

- 정부·공공기관의 창업기업 제품·서비스 구매 확산

* 시범구매제도 참여기관 : ('18년) 60개 → ('19.9월) 361개(약 6배)

* 시범구매제품 구매실적 : ('18년) 268억원 → ('19.1~11월) 1,212억원(약 4.5배)

- 신산업·신기술 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

*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등) 대상 혁신사제품 시범구매사업 실시('19년)

실패부담을 줄여주고 재도전의 걸림돌을 제거했습니다.

- 정책금융의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면제)하고, 정책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부실채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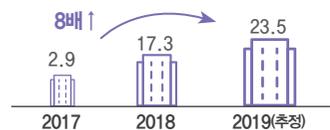
* 연대보증 면제 실적 : ('17년) 2.9조원 → ('18년) 17.3조원

→ ('19.10월) 21.6조원 → ('19년) 23.5조원(추정)

* 부실채권 정리 : ('18년) 1.4조원 → ('19년) 1.2조원(추정)

→ ('22년까지) 3.3조원

〈연대보증 면제 실적(조원)〉



지속적인 규제개혁

규제 샌드박스로 시장출시·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헬스케어·공유경제·블록체인·빅데이터 등 신산업·신기술 분야 180건의 과제 처리('19.11월 기준)
-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처리된 과제의 71%가 중소·벤처기업에서 제안
 - * 중소기업에 실증사업비 최대 1.2억원, 보험료 최대 1,500만원 지원
- 규제자유특구 1차 지정*('19.7월, 7개 시·도), 2차 지정**('19.11월, 7개 시·도)
 - *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 ** 광주(무인자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를 지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수소차, 가상현실(VR) 등 신산업 분야 현장어로 규제혁신 추진 (4차례, 240건)
- 총리실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중심 중기·벤처 등 기업 현장어로 해소(500건)
 - * 업종별 협단체(85개) 간담회, 지역 현장간담회(11회) 등을 통해 지속 소통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영업-폐업-재창업 생애주기별 규제혁신('19.10월 140건)
-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규제 발굴 개선(399건)

적극행정과 정부 입증책임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정부 입증책임제 확대 시행('19.3월, 중기벤처부 규제입증위원회 구축)
 -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 벤처·창업인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개선
 - * 사례 : 창업 후 공장 증설시 20%까지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신고로 같음하도록 규제 완화
- 중소기업 규제발굴 및 개선, 민원해결을 통한 애로해소*, 적극행정 면책신고센터 설치·운영 (중기부, '19.10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현장 체감도 제고 노력 병행
 - * 현장규제 개선, 중소기업 건의사항을 반영한 규정개정, 재해 중소기업 지원 등

02 | 소상공인 · 자영업자

- ◆ 정책금융 지원 확대와 금융접근성 제고를 통해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겠습니다.
- ◆ 사람이 모이고 싶은 상권을 만들고, 경영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위한 전담 조직과 법을 만들었습니다.

-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 신설('18.8월)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추진*('19.12월)
* 본회의 상정(11.29), 현재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에 따른 지연 중

상가임대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환산보증금 상향(전체 임차인의 약 95% 보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10년)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했습니다.

- 자영업자 ·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 우대수수료 적용범위(연매출 상한) : ('15.1월) 3억원 → ('17.7월) 5억원 → ('19.1월) 30억원
* 우대수수료율(신용/체크) : (3억 이하) 0.8%/0.5%, (3억~5억) 1.3%/1.0%, (5억~10억) 1.4%/1.1%, (10억~30억) 1.6%/1.3%
*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비중 : ('17.1월) 77% → ('17.7월) 84% → ('19.1월) 96%

수수료를 대폭 인하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중진 : 2% 내외)
↓
연매출 5억~10억원 : 1.4%,
연매출 10억~30억원 : 1.6%

우대가맹점 구간 확대



5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96%로 확대
('19.1월 기준 262.6만개)

카드매출 세액공제 확대



500만원 → 1000만원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 · 중소기업점 세액공제 한도
확대로 사실상 카드수수료 0%
('19.1월 기준 228.8만개)

- 온라인 사업자,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 적용('19.1월)
* '19.1월 기준 우대수수료 적용 현황 : 온라인 사업자 57.5만명, 개인택시 사업자 16만명
- 성장성이 있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등에 '초저금리 특별대출' 시행('19.1월~)
* '19.10월까지 1.7조원 대출(기준금리만 적용), 3년간 약 1,500억원 이자절감 효과 기대

- 담보 · 신용 한도가 부족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 실시
* '19.10월까지 1,527억원 대출, 대출한도 확대, 금리부담 경감(약 1%p 인하) 등 기대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생업안전망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임금근로자 전환, 비상계형 업종으로 재창업 지원
* 재취업 실적 : ('17년) 1,649명 → ('18년) 1,755명
* 재창업 미 업종전환 비율 : ('17년) 59.3% → ('18년) 59.5%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 확대(1~2등급 → 1~4등급), 보험료 30~50% 지원
- 노란우산공제 누적가입자 159만명 달성('19.9월)
* ('17년) 113만명 → ('18년) 140만명 → ('19.9월) 159만명



소상공인 간 협업과 온라인 진출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소상공인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협업교육, 공동사업, 판로지원 강화
* 협업교육기관 운영 확대('18년, 6곳 → '19년, 8곳), 조합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사업 지원(256개), 조합제품 판로 지원(소셜커머스 36개, SB광고 12개, 지역판매전 313개)
-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 TV홈쇼핑 · T커머스(150개사), V-커머스 방송 출연 및 콘텐츠 제작(300개사), 쇼핑몰 기획전(25회, 400개사), 해외진출(50개사) 등 지원

골목상권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 구도심 상권 개발을 위한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시행 확대
* ('18년) 3곳 → ('19년) 10곳
- 자영업 · 소상공인 전용 지역사랑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 지역사랑상품권 : ('18년) 0.37조원 → ('19년) 2.3조원 / 온누리상품권 : ('18년) 1.53조원 → ('19년) 2.0조원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주차장 설치 지원을 통한 매출 상승
* '19년 전통시장 지원 현황 : (화재알림시설 설치) 178곳 / (노후 전선 정비) 50곳
* 주차장 보급현황 : ('15년) 68.9% → ('16년) 70.9% → ('17년) 72.2% → ('22년) 88.0%(목표)
* 전통시장 화재 피해금액(건당) : ('16년) 749백만원 → ('17년) 68.2백만원 → ('18년) 22.3백만원
* 전통시장 매출액 추이 : ('05년) 27.3조원 → ('10년) 21.4조원 → ('15년) 21.1조원 → ('16년) 21.8조원 → ('17년) 22.6조원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도입('19.1월) 및 신속한 지정심의 추진
* (신청) 18개 업종 / (지정) 서점업, 자판기운영업 LPG연료소매업 등 총 3개 업종 지정

〈전통시장 매출액〉



공정한 영업환경 구축

가맹점·유통·대리점 분야의 '갑을관계'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가맹 분야〉

-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
* 가맹점주가 신고, 분쟁조정신청,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계약해지 등을 통해 보복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
-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제도 도입,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3배 손해배상제 도입·확대
* 「하도급법」 개정(18.1월), 「가맹법」 개정(18.1월), 「유통업법」 개정(18.10월)
- 점주의 영업지역을 본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금지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대규모 유통 분야〉

- 대형쇼핑몰·아울렛을 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입점업체 보호 강화
*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하여 '스타필드' 등 대형쇼핑몰의 임대차 거래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19.4월)
-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 도입
* 대형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납품업체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대리점 분야〉

-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행위의 구체적 유형 고시
* 불공정한 대리점거래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규제의 명확성 제고
- 의류·식음료·통신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개정
* 최소 계약기간 보장, 공급업체·대리점 간 비용분담 비율 사전 설정 등
- * 서면실태조사(19.4월)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따라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이 3~4배 차이

03 | 중소기업인

- ◆ 중소기업 R&D 지원, 자금조달, 수출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 상생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가 잘사는 경제를 구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성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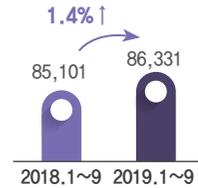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 육성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17.7월)
-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설치,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평가 기능 도입('18.6월)

중소기업 수출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 중소기업 해외 수출 지원, 대·중소기업 동반수출 확대
 - * 수출 중소기업 수 : ('18.1~9월) 8만 5,101개사 → ('19.1~9월) 8만 6,331개사
 - *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K' 론칭('19.9월)
 - * 글로벌 한류행사, 대기업 방송 플랫폼, 네트워크·인프라를 활용해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 ('18년 75개 과제, 1,189개사 지원 완료 → '19년 63개 과제, 1,289개사 지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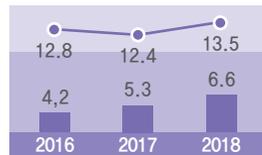
〈수출 중소기업 수(개)〉



R&D 지원 강화로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 중소기업 R&D 지원 임기 내에 2배 확대
 - * 중소기업 R&D : ('17년) 1.2조원 → ('18년) 1.5조원 → ('19년) 1.7조원
 - * 정부출연금 1억원당 매출 : ('17년) 12.4억원 → ('18년) 13.5억원
 - * 정부출연금 1억원당 고용 : ('17년) 5.3명 → ('18년) 6.6명

〈R&D지원에 따른 매출 및 고용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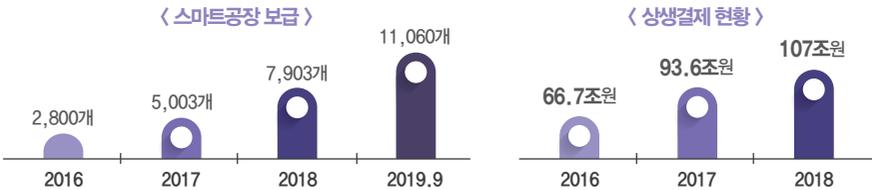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겠습니다.

- 수위탁거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제도 도입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18.11월) 및 국회 소관 위원회 통과('19.7월)
- 입찰 등 거래 관계에서의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민사구제(손해배상 등)와 행정구제(조사·시정권고) 도입
 - *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18.7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대폭 확대, 전문인력 5만명 양성
 - * 스마트공장 보급 : ('16년) 2,800개 → ('17년) 5,003개 → ('18년) 7,903개 → ('19.9월) 11,060개
 - * 스마트공장 보급성과 조사('14~'17년) 결과 : 생산성 30% 증가, 불량률 43.5% 감소, 원가 15.9% 감소, 납기단축 15.5%, 고용평균 3명 증가, 산업재해 18.3% 감소
-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유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참여 · 상생협력기금 조성
 - *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16개 대기업 참여('19.10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1조 741억원 조성('19.9월 누적)
- 협력이익배분제를 동반성장 모델로 추진
 - *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18.8~9월, 리서치랩)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선호(46.8%)
 - * 시범사업 추진실적('19년, 누적) : (6월) 6개사, 10과제 → (7월) 11개사, 45과제 → (8월) 18개사, 95과제 → (9월) 23개사, 148과제
- '18년 연간 상생결제액 최초로 100조원 돌파
 - * 연도별 상생결제 현황 : ('16년) 66.7조원 → ('17년) 93.6조원 → ('18년) 107조원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갑을문제' 개선·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대기업의 전속거래 강요·부당 경영정보 요구 등을 금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
 - (「하도급법」 개정, '18.1.4월)
 - * 「하도급법」상 보호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 기술유용 등에 대한 조사 개시 시효 연장(3년 → 7년)
- 중소기업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3배 손해배상제 도입·확대(「하도급법」 개정, '18.1월)
- 하도급 분야 임금·자재대금 체불문제 개선(「하도급법」 개정, '19.4월)
 - *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불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 분야별 실태조사 결과 전년 대비 갑의 불공정한 행위가 감소했다는 응답 등 거래관행 개선
체감 비율 증가

* 하도급 : ('17) 86.9 → ('18) 94.0 / 가맹 : ('17) 73.4 → ('18) 86.1 / 유통 : ('17) 84.1 → ('18) 94.2

불공정 '갑질행위'를 적극 제재하고 있습니다.

- 기술유용, 부당 단가인하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의 근절을 위한 법집행 강화

* 기술유용행위 조치사례 : ㈜아너스(고발, 과징금 5억원, '18.12월), 현대건설기계(주) 및 현대중공업(주)(고발, 과징금 4억 3,100만원, '19.6월), 한화(주)(고발, 과징금 3억 8,200만원, '19.10월) 등

* 부당 단가인하 조치사례 : 대우조선해양(주)(고발, 과징금 107억 9,900만원, '19.2월), LG전자(주)(과징금 33억 2,400만원, '18.7월)

- 중대·상습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요청 : 문재인정부 출범 후인 '17.5월부터 '19.9월까지 GS건설(주) 등 12개사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을 요청하기로 의결

-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도 강화

* 과징금 부과금액 : ('17년) 96억 1,500만원 → ('18년) 110억원 → ('19.8월) 199억 6,500만원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 공급원가 인상 부담완화를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하고, 기맹본부·유통업체에 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개정('18.1월)

* (중전) 원자재 가격 인상 → (확대) 인건비·임차료 등 경비 인상된 경우 포함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 확대(「하도급법」 개정, '19.11월) :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 없는 공사기간 연장 등의 경우에도 대금 조정신청 가능

- 중소기업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19.8월)

* 생산·가공·판매·구매·보관·상표 등 공동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82조 및 제93조)

04 | 직장인

- ◆ 노동시간과 임금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차별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 ◆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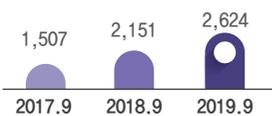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장기근속할 경우 자산형성을 지원
* 2년 근속 시 1,600만원(정부 900만원 지원), 3년 근속 시 3,000만원(정부 1,800만원 지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통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목돈마련 지원
* 청년(720만원), 기업(1,200만원), 정부(1,080만원)가 5년간 공동 적립하여 3천만원 자산 형성
* ('18.하반기) 3.6만명 → ('19.1~11월) 3.7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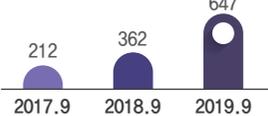
소규모사업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 10인 미만 사업장에 월보수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
* '두루누리' 신규 가입자 : 보험료의 80~90% / 기존 가입자 : 보험료의 40%

〈 두루누리 전체 지원자 수(천 명) 〉



〈 두루누리 신규가입자 지원자 수(천 명) 〉



중소기업 재직자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계약학과 재교육형 운영을 통해 학사·석사·박사 학위 취득 지원
* 중소기업 계약학과 재교육형 과정(49개 학과) 등록금의 65%(석·박사), 85%(전문학사·학사) 지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만34세,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및 한도 확대
* 융자 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 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
-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동일기업 3년 이상) 재직자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 지원
* 주택특별공급 추천물량 : ('18년) 1,395호
-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공급(3천호) 및 행복주택 등 우선공급(1.2만호) 추진(~'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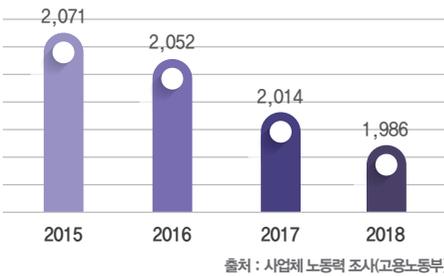
노동시간 · 최저임금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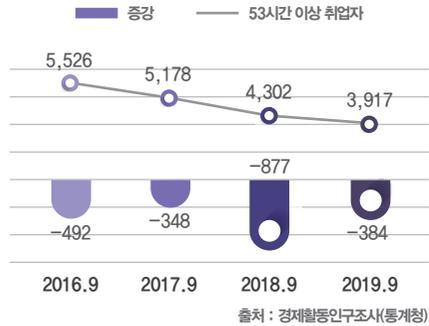
-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기업규모 · 업종별로 단계적 단축

* 300인 이상 사업장 : '18.7월(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월부터 적용) / 50~300인 미만 사업장 : '20.1월 / 5~50인 미만 사업장 : '21.7월

< 연간 노동시간(상용 5인 이상) >



< 주 53시간 이상 취업자 수(천 명) >



근로자의 '쉽표 있는 삶'을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제도를 신설했습니다.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근로자의 '쉽표 있는 삶'을 지원
- 중소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 지원('18년 2만명, '19년 8만명, 총 10만명)
- * 기업 10만원(25%), 정부 10만원(25%), 근로자 20만원(50%) 등 국내여행경비 함께 적립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고 가족돌봄휴직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가족의 질병 · 사고 · 노령,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신설 (연 10일)
- 돌봄 대상인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와 손자녀 추가
- * (기존)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 (개정) 조부모와 손자녀 추가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했습니다.

-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근로자의 임금분배구조 개선
- * 최저임금 : ('18년) 7,530원 → ('19년) 8,350원 → ('20년) 8,590원
- * 저임금 근로자 비중 : ('16.6월) 23.5% → ('17.6월) 22.3% → ('18.6월) 19.0%
- * 임금 5분위 배율 : ('16.6월) 5.24배 → ('17.6월) 5.06배 → ('18.6월) 4.67배
-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적으로 개편('19.1월)
- * 최저임금에 정가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산입

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조성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 전환
('17.7월~'20.12월)

* (1단계)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환(157천명) →
(2단계) 지자체 출연기관 등 전환(3.8천명) →
(3단계) 민간위탁기관 정책방향 발표('19.2월)

〈 정규직 전환 이후 연봉 증감 〉



증가액 390만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 처우 개선

* 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 우선 지급(월 20만원 이상 임금 인상 효과)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로 공정한 채용질서 정착 및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19.2월, 182건 적발) 및 지속 점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19.7월 시행)

*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금지, 괴롭힘 발생 시 조사의무, 행위자 징계, 피해자 보호 등 사용자 조치사항 등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위한 근거 마련

산재사고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 29년 만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19.1월)

*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청의 안전·보건책임 강화, 사업주 처벌 강화, 특수형태근로자를 보호대상에 포함 등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지급기간 연장 : 최대 8개월 → 9개월, 지급수준 상향 : 평균임금 50% → 60%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1인 자영업자 등 취약근로자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확대

* ①상시 1인 미만 사업장 및 비건설업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근로자('18.7월~)

②대학교 현장 실습생('18.9월~)

③건설기계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19.1월~)

④서비스 업종 1인 자영업자('19.1월~)

〈 고용보험 가입자 추이(천 명) 〉



임금체불 예방 및 구제를 강화했습니다.

- 재직자 체당금 신설, 지급절차 간소화, 체불 재발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 등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19.1월)하고, 관련 법 국회 제출
-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400만원 →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고시 개정, '19.7월)
- 임금·퇴직금이 체불된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1,000만원 범위 내 저금리 생계비 융자 신설 ('19.9월)

근로장려금(EITC)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 일하는 서민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 지원대상 대폭 증가('17년 166만 → '19년 334만 가구)
- * 연령요건 : 30세 이상 → 폐지(재산기준 : 1.4억원 미만 → 2.0억원 미만)
- 소득요건 : (단독) 1,300만원 → 2,000만원 / (홀벌이) 2,100만원 → 3,000만원 / (맞벌이) 2,500만원 → 3,600만원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이직 예정 근로자에서 45세 이상 대규모기업 저소득 근로자까지 확대
- *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훈련비 지원(5년간 300만원)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통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장기근속할 경우 자산형성을 지원
 - * 2년 근속 시 1,600만원(정부 900만원 지원), 3년 근속 시 3,000만원(정부 1,800만원 지원)
 -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

청년 근로자의 주거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임차보증금) 만 34세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융자지원 및 한도 확대
 - * 융자지원 : ('18년) 7,483억원 → ('19.10월) 5조 8,248억원 / 한도확대('18.9월) : 3,500만원 → 1억원
- (주택청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교세 신설(한도 5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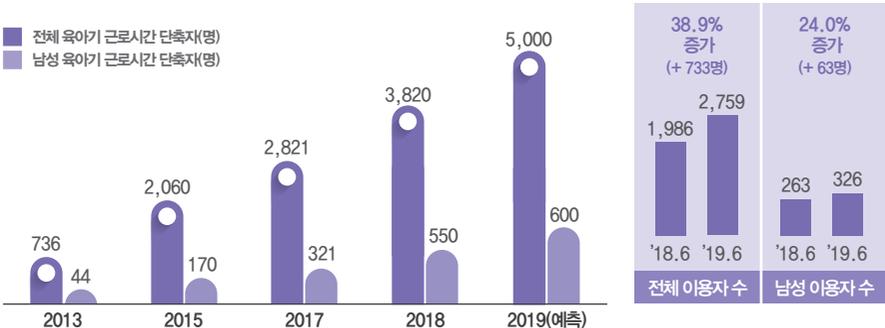
신중년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중년 대상 숙련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6개월 장기과정 개설, 맞춤형 훈련 제공
- 40세부터 생애경력 설계를 통해 미래를 위한 경력관리 · 능력개발 등을 지원
 - * 이용자격 : ('15년) 50세 이상, 재직자 → ('17년) 40세 이상, 재직자 및 구직자
 - * 서비스 이용자 수 : ('17년) 2만 3천명 → ('18년) 2만 8천명 → ('21년) 5만명까지 단계적 확대

출산 · 육아기 부모에 대한 휴직 및 임금지원 등을 확대했습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인상
 - * ('18년) 월 상한 200만원 → ('19년) 월 상한 25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 유급 3일+무급 2일 → 유급 10일('19.10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최대 2년까지 확대('19.10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증가 추이 〉



05 | 취업준비생

- ◆ 청년고용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 공정채용이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고용 확대

청년고용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정원의 3% 이상 고용) 적극 추진
* 청년채용 인원 : ('16년) 1.9만명 → ('17년) 1.9만명 → ('18년) 2.6만명
- **(민간부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3년간)
* 기업당 평균채용인원 증가('18년 수혜기업) : ('16년) 7.4명 → ('17년) 7.5명 → ('18년) 9.5명
** 제도 시행 전('17년)은 전년 대비 1.5% ↑ (7.4 → 7.5명) / 제도 시행 후('18년)는 전년 대비 26.7% ↑
- 청년 1명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 이외에 대기업도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공제액을 100만원 인상**
* 중소·중견기업 : 2년 → 3년, 대기업 : 1년 → 2년
** 400만원(대기업) ~ 1,200만원(중소기업)
- 정부 R&D 지원금 4억~5억원당 청년 1명 채용 의무화, 청년 채용 시 기업이 납부하는 기술료 감면, 청년채용 인건비 민간매칭자금으로 인정 등 R&D 지원체계 개편
* 19.9월까지 '19년 목표 1,471명 대비 2,394명 채용(달성률 162.7%)

청년들이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장기근속할 경우 자산형성을 지원
* 2년 근속 시 1,600만원(정부 900만원 지원), 3년 근속 시 3,000만원(정부 1,800만원 지원)
* ('17년) 4.5만명 → ('18년) 15.5만명 → ('19.9월) 25만명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5년간 소득세를 90% 감면해 소득증대 지원(연간 150만원 한도)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매월 5만원의 교통비 지급
* ('18년) 14.9만명 → ('19.9월) 16.3만명

청년 취업·창업 지원 강화

청년들이 취업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하여('19.3월)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
 - * 구직활동지원금 지원에 따라 아르바이트 청년 비율이 감소(25.3→16.9%)하는 등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어 구직활동 비율(89.2→97.5%)과 구직활동 시간(日 평균 6.33→7.42시간) 증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정('20.7월)
 - * (1유형) 중위소득 50%이하 저소득층(청년은 50~120%)에게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더불어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지급, (2유형) 1유형에 속하지 않는 청년·저소득층·중장년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제공
- 저소득·저신용 청년에게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청년·대학생 햇살론 출시 예정('20년)
- 4차 산업혁명 대비 혁신성장산업 등 현장수요에 맞는 선도인력 양성 확대
 - * '19.9월까지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1,700명, 정보보호 분야 883명, 블록체인 662명 교육 등
- 일·학습 병행 학습근로자와 참여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19.8월)
 - * 기업의 도제식 현장훈련과 학교·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병행해 실무형 인재양성 지원
 - * 약 1.5만개 기업, 8.8만명 일·학습 병행 참여자 훈련 실시('19.8월말 기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 연 2.0%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6년간 대출할 수 있는 청년전용창업자금 확대 예정('19년 1,300억원 → '20년 정부안 1,600억원)
-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 형태로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전담 멘토를 매칭해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 ('18년 실적) 1,512명 지원
- 생활 밀착형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을 발굴하여 멘토링 지원 및 사업실패 시 상환 부담이 없는 성공불용자* 제공
 - * ('18년 실적) 4,188명 발굴·컨설팅, 2,573명 성공불용자 지원

공정한 취업이 자리잡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19.7.17)
 - *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행위 금지
 - * 과태료 :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

06 | 여성

- ◆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 실질적 성평등 사회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이 안심하는 사회

여성폭력·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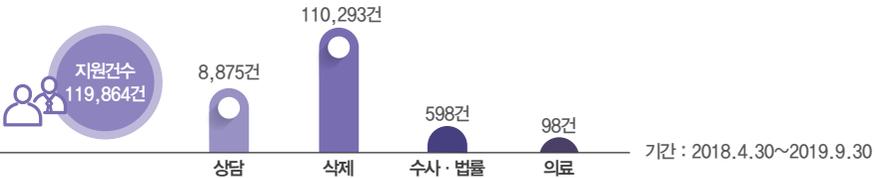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협의회 및 추진점검단 운영('18년~)을 통한 제도 개선*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성폭력 피해자 심리치료(회당 '18년 15만원 → '19년 20만원) 및 무료법을 지원 확대('18년 16억원 → '19년 29억원)

** 무고죄에 대한 수사 유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등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18.4월~) 운영, 상담·법률·의료 지원 연계 및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운영실적 >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원('19년),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상담소 운영('19.4월~, 5개소), 신속한 피해자 진술조력인 지원* 등 맞춤형 보호 강화

* 진술조력인 지원 : '19.9월 기준 1,665건, 전년 동기(1,304건) 대비 27.7% 증가

- 4개 영역별(공공, 고용, 교육, 문화)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설 및 운영

* 공공 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신설('18.3월) 및 운영(상담 603건, 의료 지원 64건, 법률 지원 301건/'18.3월~'19.9월)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여성안전구역 및 여성안심귀갓길 CCTV 설치 등 방법시설 확충

* ('17.1월) CCTV 4,971개, 보안등 33,879개 → ('19.9월) CCTV 6,153개, 보안등 37,292개(누적)

- 보복범죄 및 2차 피해 우려 대상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확대

* 스마트워치 지급 : ('17년) 4,504건 → ('19.9월) 5,31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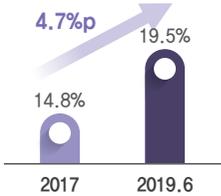
* 임시숙소 확충(누적) : ('17년) 294개소 → ('19.9월) 449개소

여성의 사회활동 및 대표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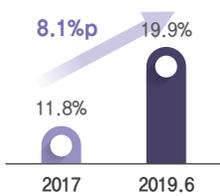
공공·민간 부문에 여성 진출을 확대해 나갑니다.

- '공공 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계획'('18~'22년) 추진, 공공 부문의 유리천장 해소 노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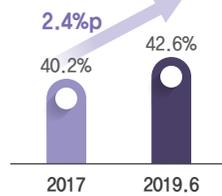
〈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공무원 〉



〈 공공기관 임원 〉



〈 정부위원회 위원 〉



- 여성의 진출이 어려웠던 군·경찰 분야의 여성참여 확대

* 군 간부 여성 신규임용 : ('17년) 6.5% → ('18년) 9.1%

* 일반경찰 신규임용 : ('17년) 약 10% → ('18년) 약 25%

- 민간 부문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증진

*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단체와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업무협약 체결('19.3월), 기업이 스스로 성별 균형적 인력운용 목표를 수립·이행하는 협약 체결('19.4월~, 11개 협약, 계열사 포함 63개 기업 참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 직장고충, 노무 상담,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등 재직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확대

* ('17년) 15개소, 14,005명 지원 → ('18년) 15개소, 16,393명 지원 → ('19년) 35개소, 21,446명 지원('19.9월 기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국158개소)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구직상담 : ('17.9월) 36.5만 건 → ('19.9월) 41.9만건(14.8% ↑)

* 취업건수 : ('17.9월) 13.2만 건 → ('19.9월) 13.7만건(3.8% ↑)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일자리 제공 및 출산·육아 휴직자 대체인력 활용 지원

* ('17년) 329명 → ('19년) 444명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에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 심사기준 개선으로 그간 소외된 여성 독립운동가 포상 확대

* ('16년) 전체 312명 중 14명(4%) → ('19.12월 잠정) 전체 647명 중 113명(17%)

07 | 장애인

- ◆ 31년 만에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 장애인의 권리의식 신장과 복지욕구 다변화를 반영하여 소득·돌봄·건강·자립 등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 맞춤형 지원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19.7월~), 장애등급에 의존한 획일적 지원 탈피,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대
- * 서비스 기준 변경에 따라 12개 부처 23개 서비스 대상 확대, 활동지원 평균 25.1시간(114.9 → 140시간) 증가, 이용자 본인부담금 최대 50% 경감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기존 1~3급) → 전체 장애인]

발달장애인은 생애주기별로 종합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교육·일자리 지원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 ('18.9월)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 확대(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 → 50%, '19.1월)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7개소(서울대학교병원 등) 지정('19.10월)
* 복수의 진료과목 이용 시 최소 일수로 내원토록 편의 제고 및 협진 지원
-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을 위해 성인 주간활동 서비스('19.3월) 및 청소년 방과후활동 서비스 도입·제공('19.9월)

분야별 지원

< 장애인연금 >

장애인 소득·고용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18.9월), 생계·의료 수급자는 월 최대 30만원 지급('19.4월)
- 장애인의 무고용률 상향('19.1월) : 공공 3.2% → 3.4%, 민간 2.9% → 3.1%
-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18.1월, 중증남성 40만원 → 50만원)
- 361개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8,623명 고용(중증장애인 6,509명, '19.9월말)
* ('19년) 63개 사업장 대상 최대 10억원 지원(직업시설, 부대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



장애인 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시('18.5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선정(병원 : '18년 1개소 / 센터 : '19년 2개소)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1개소)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6개소, '19년)
-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대상자 확대('18.7월)
* 욕창예방방석 : 뇌병변 장애 추가 / 이동식 전동리프트 : 지체장애 추가 등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6개소 지정('19년)

장애인의 문화·여가 등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18개소, 3,668회)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체육 수업 54개소 운영('19.9월)
-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575개소 운영 지원('19.9월)
- 19개 국립공원 42개 구간 38.8km 무장애 탐방로 조성, 국립공원 야영장 21곳에 104동의 무장애 야영지 운영('19.11월 기준)

08 | 저소득층

- ◆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혁신하겠습니다.
- ◆ 국민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과 에너지 자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부조 개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으로 기초수급자를 확대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통해 최대 48만명 신규 지원('19.8월)
* 1단계('17.11월)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이 모두 포함된 경우
2단계('18.10월) :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단계('19.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생계·의료급여) 등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 ('16.12월) 163만명 → ('19.9월) 185만명

자활사업 확대로 기초수급자의 탈빈곤을 촉진합니다.

- 자활장려금 도입('19.1월), 자활급여 인상('18년 최대 8.2% 인상, '19년 최대 26.6% 인상) 등으로 자활 참여자 근로유인 강화
- 근로빈곤층 창업 지원 및 취약계층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마련 ('18.7월 발표)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자활기업 기준 완화, 커뮤니티케어 등 공공사업 연계 강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관련 내용 추가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을 개선합니다.

-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기준 개선
* 월 20일 이상 → 월 8일 이상 근로
-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준 확대('19.1월)
* (두루누리 지원) 월 190만원 → 월 210만원 미만 / (농어업인 지원) 기준소득 91만원 → 97만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18년~)
* '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중 기존 경감대상자는 30%, 신규 직장가입자는 50~60% 경감

주거·에너지 복지 강화

사회취약계층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 영구·국민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확대 공급
 - *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15% → 25%로 상향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확대, 취약계층·고령자 보증금 제외, 중증장애인 우선공급 실시
 - * 영구임대 매입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가구 추가
- 주거급여 등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입주기간 단축(신청~입주 : 2개월 → 7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월), 지원수준 상향으로 19년 주거급여 수급 100만 가구 돌파
 - * 주거급여 : (수급가구) ('18.9월) 83만 가구 → ('18.12월) 95만 가구 → ('19.10월) 102.5만 가구
 - (지원금액) ('17년) 11.7만원 → ('18년) 12.9만원 → ('19.9월) 13.4만원
 - (소득기준) ('18년) 중위소득 43%이하 → ('19년) 중위소득 44% 이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바우처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에너지 가격 상승 추세를 고려해 바우처 지원단가를 점진적으로 상향
 - * 지원단가(가구당) : ('17년) 9.5만원 → ('18년) 10.2만원 → ('19년) 10.9만원(하절기 포함)
- '19년부터 에너지바우처를 하절기(7~9월)에도 지급하고,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통합 신청·발급 시행
 - * 하절기 잔여 바우처를 동절기로 이월 사용토록 해 바우처 사용을 제고
- 저소득가구 주거환경에 적합한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보급('19년~)

〈 지원단가 상향 〉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시행 〉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6,700원('19)

〈 냉방기기 신규 지원 〉



09 | 다양한 가족

- ◆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일원으로 활약하도록 돕겠습니다.
- ◆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착 및 자립 지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했습니다.

-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을 위한 국제결혼 이민관 파견, 결혼이민사증 심사 강화('18.4월)
 - * 국제결혼 이민관 파견 후 결혼중개업법 위반행위 46건 적발('18.4월~'19.9월)
- 한국생활에 어느 정도 정착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미래설계, 취업 연계를 돕는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 지속 확대
 - * 결혼이주여성 자립지원패키지 운영기관 : ('17년) 101개소 → ('18년) 152개소 → ('19년) 183개소
 - * 결혼이주여성 자립지원패키지 이용인원 : ('17년) 15,989명 → ('18년) 36,551명
- 다문화가족 교류 · 소통공간 설치 · 운영('19년~)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자녀돌봄 및 성장 지원, 지역사회 통합 등을 위한 공간 80개소 설치
- 학업적응을 돕는 찾아가는 자녀생활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만 12세 이하 → 초등학교 재학 중)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 회복, 사회성 · 리더십 개발을 위한 '다(多)재더능' 프로그램 운영
 - * 부모 · 자녀관계 향상,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등 참여자 : ('17년) 57,938명 → ('18년) 96,321명 → ('19.9월) 111,773명
- 다문화가족 자녀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인재 DB 구축
 - * 이중언어 인재 DB 등록 인원(누적) : ('17년) 589명 → ('19년) 771명
- 학교 교원의 다문화 이해 증진을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원활한 학교생활 지원
 - * 교원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및 연수를 의무화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17.12월)
- 청소년, 일반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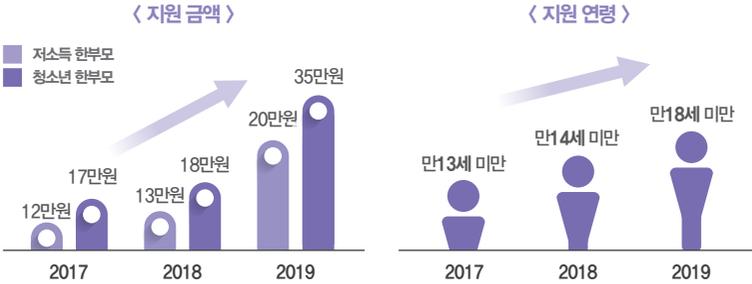
〈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수료 인원 〉



한부모가족 등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저소득·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를 각각 월 20만원, 35만원으로 인상(19년)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연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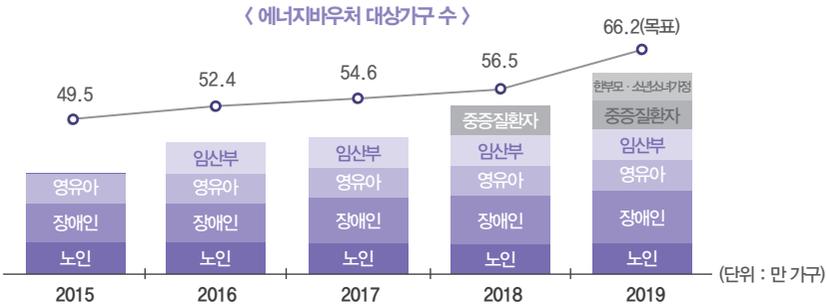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을 확대했습니다.

- 비양육 부모의 양육책임 강화를 위해 양육비 채무자 소득·재산 조사절차 간소화(18.9월~)
 - *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사 가능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조건 완화
 - * 지원기간 최장 9개월 → 12개월로 확대(18.9월~), 긴급상황(질병, 실직, 폐업 등) 시 지원 확대(19.7월) 등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에 에너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포함(19년)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공공주택 우선공급대상에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포함(18.7월)
- 버팀목대출(연소득 5천만원 이하, 1%p), 디딤돌대출(연소득 6천만원 이하, 0.5%p) 우대금리 도입

10 | 과학기술인

- ◆ 미래준비와 과학기술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 기초연구 예산을 2022년까지 2배 확대하는 등 연구 몰입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 ◆ 연구자 중심 R&D 혁신으로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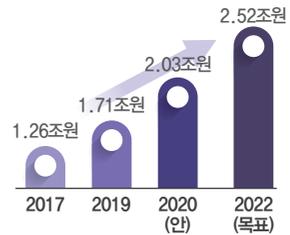
정부 R&D 투자 확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확립했습니다.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19년 총 7회, 의장 국무총리)로 분야별 21개 혁신전략 마련 등 범부처 연계 · 조정 강화

* '과학기술 · ICT 인재성장 지원계획'(18.11월), '국가 R&D 혁신 · 도전성 강화방안'(19.5월), '소재 · 부품 ·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19.8월) 등

〈기초연구 지원 확대〉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 확대합니다.

- 연구주제 · 연구비 · 연구기간을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자유공모방식 기초연구사업 '17년 대비 '22년까지 2배 확대

연구자의 성장 단계에 따른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연구자의 연구역량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을 통해 단절 없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우수연구(신진 → 중견 → 리더연구) : ('17년) 6,839억 → ('19년) 8,456억

* 안정성중심 생애기분연구(생애첫/기분/재도약연구) : ('17년) 300억 → ('19년) 1,340억

- 공동연구그룹 규모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소규모(기초연구실) → 중규모(선도연구센터) → 대규모(IBS, 대형국책연구사업 등)

과감하고 도전적인 R&D 투자로 미래를 준비해 나갑니다.

- 정부 R&D 예산을 '19년 20.5조원에서 '20년 24.1조원으로 대폭 확대(17.3% ↑, 정부안)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혁신성장 성과 확산 등을 적극 뒷받침

* 혁신적 기초연구, 혁신성장 확산 · 가속화(DNA+BIG3),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 기술 자립 등 중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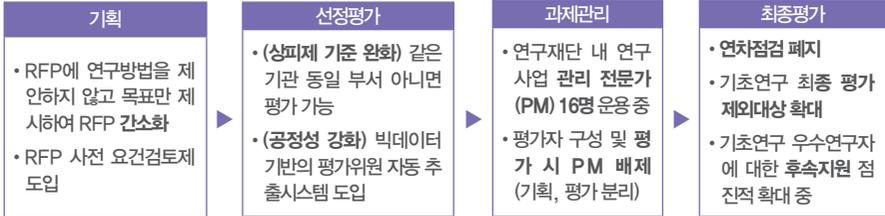
- 소재 · 부품 · 장비 기술자립을 위해 R&D 투자 확대('20년 1.7조원)와 병행하여 다양한 R&D 방식(정책지정, 경쟁형 등) 시도

- 혁신도전 프로젝트(G-First, 과학한제도전융합연구개발 등) 세계 최초 · 최고를 지향하는 도전적 연구 시스템 구축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조성

연구자 중심으로 R&D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 R&D 프로세스 혁신방안 수립('17.9월)



-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정('19.3월)

* 학생 인건비 총액관리, 연구실 운영비 직접비 계상(직접비 5% 이하, 정산면제), 다년도 과제 이월 활성화, 주관기관의 정부 R&D 관리책임 강화(간접비 별도계정 관리, 행정인력비용 계상) 등
* 연구윤리 신고센터 신설을 통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강화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17개 연구비관리시스템을 2개(과기정통부 Ezbaro, 산업부 RCMS)로 통합 완료('19.9월)
- 20개 부처·기관별 과제지원 시스템과 연구자정보 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근거 법령 마련

청년·여성과학기술인 경력개발 지원

청년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을 지원합니다.

-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기업 연구과제 참여 지원('18년 136명 → '19년 220명)
-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를 통해 창출한 연구성과가 창업을 통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Lab-to-Market' 맞춤형 육성지원
- * ('19년) 예산 110억원 → ('20년)안) 241억원으로 대폭 확대

학생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합니다.

- 4대 과학기술원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 시행('19.1월)
- 출연연구기관 소속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결(3,485명, '19.9월 기준)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를 지원합니다.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일자리 제공 및 출산·육아 휴직자 대체인력 활용 지원
- * ('17년) 329명 → ('19년) 44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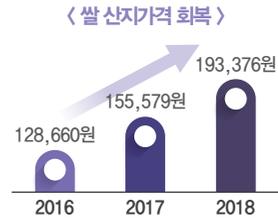
11 | 농어업인

- ◆ 농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롭고 활기찬 농산어촌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업인 소득 증대

쌀값 회복 등 농어가 소득이 증대되었습니다.

- 농어가소득 전년 대비 7.6% 증가(농가 10%, 어가 5.8%)로 역대 최고치 달성
 - * 농가소득 : ('15년) 3,721만원 → ('16년) 3,720만원 → ('17년) 3,824만원 → ('18년) 4,207만원 (10.0% ↑)
 - * 어가소득 : ('15년) 4,390만원 → ('16년) 4,710만원 → ('17년) 4,901만원 → ('18년) 5,184만원 (5.8% ↑)
- 쌀 생산면적 조정(3만3천ha 감축) 등으로 쌀값 회복 및 수급 안정
 - * 쌀값 추세(80kg당) : ('13년) 173,372원 → ('16년) 128,660원 → ('17년) 155,579원 → ('18년) 193,376원
 - * 쌀 생산조정제로 시장 격리효과(17만 7천톤) 및 시장 격리비용 (보관료 등 4,779억원) 절감
- 직불금 전년 대비 5만원 인상 등 농어가 소득안전망 강화
 - * 발농업직불(ha당) : ('17년) 45만원 → ('18년) 50만원 → ('19년) 55만원
 - * 조건불리지역직불(ha당, 농지/초지) : ('17년) 55만원/30만원 → ('18년) 60만원/35만원 → ('19년) 65만원/40만원
 -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어가) : ('17년) 55만원 → ('18년) 60만원 → ('19년) 65만원
- 논·밭직불금 통합 및 작물에 관계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접지불제로 개편 추진



중소농의 판로를 확충했습니다.

- 로컬푸드 활성화 및 온·오프라인 직거래 확대
 - * 로컬푸드 직매장 현황 : ('16년) 148개소 → ('17년) 188개소 → ('18년) 229개소 → ('19년) 250개소
 - *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 장터, 온라인 쇼핑 등 직거래 비중 : ('17년) 6.9% → ('18년) 8.2%
- 학교·군 급식의 로컬푸드 공급 확대로 급식 질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 * 학교 유유급식 : ('19년) 286개교, 1만 2,702명 / 우수수산물 단체급식 : ('19년) 50개교, 106회
 - * 군 급식 지역 농산물 구매비중 : ('18년) 28.7% → ('19년) 37.6%

농어촌 안전·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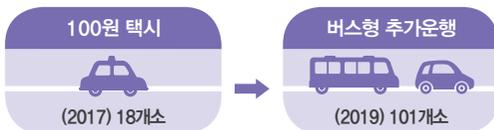
재해와 가축 질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 선제적 예방조치와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19.1월 발생한 구제역은 역대 최단기간(4일)에 방역조치 마무리, AI(조류인플루엔자)는 '18.3월 이후 현재까지 미발생
 - * 오리 사육제한(203개 농장), 철새 AI 항원검출지역(41개 시·군·구) 소독 강화, 거점소독시설 사전 운영(190개소), 중앙점검반 방역점검(5,880개소) 추진
 - * 구제역 발생현황 : ('15년) 185건 → ('16년) 21건 → ('17년) 9건 → ('18년) 2건 → ('19년) 3건
 - * AI 발생현황 : ('16/17년 동절기) 383건 → ('17/18년 동절기) 22건 → ('18.3월~현재) 0건
-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영세 농어업인 안전보험료의 국고 지원을 확대
 - * (농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 : ('16년) 66개 → ('17년) 69개 → ('18년) 73개 → ('19년) 78개
영세농업인 안전보험 국고지원 : ('18년) 50% → ('19년) 70%
 - * (어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 : ('16년) 24개 → ('17년) 27개 → ('18년) 28개 → ('19년) 28개
영세어업인 안전보험 국고지원 : ('18년) 50% → ('19년) 70%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기 파주에서 최초발생('19.9월)이었으나, 발생 시·군의 모든 돼지 수매·살처분, 중점관리·완충지역 설정 등 특단의 대책으로 경기북부 지역 이외 추가확산 저지
 - * 중점관리지역 : 경기, 강원, 인천 / 완충지역 : 고양, 포천, 양주, 동두천, 철원

농어촌의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귀농 지원 강화 및 농업·농촌 인식 개선 등으로 젊은층의 귀농 증가
 - * 40세 미만 귀농가구 : ('13년) 1,164가구 → ('17년) 1,325가구 → ('18년) 1,356가구
 - * 초기 생활안정자금(월 최대 100만원), 창업자금, 농지임대, 영농교육 등 지원
- 농촌의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에 대해 농촌형 교통모델 확대(101개소)
 - * 농촌형 교통모델 수혜자 : ('17년) 28.6만명 → ('18년) 193.5만명

< 농촌형 교통서비스 전국 확대 >



- 어업안전 보건센터를 통해 낙도·낙후지역 대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 * 의료서비스 : ('18년) 9회/451명 → ('19년) 12회/618명
- 4대 중증질환 어업인 대상 어업도우미 지원 확대(30일 → 60일), 근무시간 탄력 운영(기준 8시간/일)
- 유사시 대피소로 활용가능한 어업인 안전쉼터 66개소(누적) 조성
 - * 안전쉼터 조성(누적) : ('17년) 34개소 → ('18년) 51개소 → ('19년) 66개소

12 | 문화예술인

- ◆ 문화예술인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공정한 예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 문화예술인의 복지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창작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창작권 보호

문화예술계에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19년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11종 신규 도입 등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 보급 현황(10개 분야 62종) : 영화(9), 대중문화(6), 만화(6), 방송(6), 출판(7), 공연예술(4), 저작권(4), 게임(5), 미술(11), 애니메이션(4)
- 문화예술 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표준계약서 의무화 시행('18년~)
*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보조사업 ('18년) 35개, ('19년) 40개
- 예술인 신문고(불공정행위 신고접수 창구) 운영 확대
* ('17년) 6개 → ('18년) 9개 → ('19년) 12개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공연권 행사범위에 커피전문점 등 7개 업종 추가 확대
* ('17년) 유흥주점 등 23개 업종 → ('18년) 커피전문점 등 30개 업종
- 음악 창작자 수익분배비율 인상*, 묶음상품 할인율 단계적 폐지 추진('19년~'21년)
*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19.1월 시행), ('18년) 60% → ('19년) 65%

창작환경 지원

창작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 창작준비금(1인 300만원) 지원 확대
* ('17년) 4,014명 → ('18년) 4,501명 → ('19년) 5,500명
-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19년 10월 현재, 850건(24.6억원) 대출 실행

자유로운 창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공연연습공간,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등 창작 인프라 조성
* 공연연습공간 '17년부터 6개소 신설(현재 총 17개소),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19년 5개소 신설(총 15개소)
-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충
* ('17년) 1,967억원 → ('18년) 2,863억원 → ('19년) 3,692억원(예산)

13 | 체육인

- ◆ 체육계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 ◆ 스포츠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스포츠 공정성

스포츠 분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 7차에 걸친 권고를 통해 체육 분야 혁신 과제 발굴
 - * (1차) 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 / (2차) 학교스포츠 정상화 / (3차) 모두를 위한 스포츠 / (4차) 「스포츠기본법」 제정 / (5차) 스포츠클럽 활성화 / (6차) 엘리트스포츠시스템 개편 / (7차) 체육단체 선진화
- 스포츠 분야 불공정을 해소할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추진
 - * 주요 기능 : 스포츠 분야 비리 조사, 피해자 지원, 공정 교육·홍보 등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중·고 학생선수 학습지원을 위한 e-school 시스템 운영 확대
 - * ('17년) 2,240개교 → ('18년) 2,972개교 → ('19. 10월) 3,062개교
- 체육 분야 진로진학을 위한 체육중점학급 '19년 26개교, 51학급 운영

일자리 창출

체육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시·군·구 체육회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 ('17년) 3,050명 → ('18년) 3,177명 → ('19년) 3,540명
- 지역단위 공공스포츠클럽 확대
 - * ('17년) 55개소 → ('18년) 76개소 → ('19년) 98개소
 - * 중사자(1,247명) 중 체육지도자 비율 79%(984명) / 체육지도자 중 은퇴선수 비율 41%(407명)
- 학생·현역·은퇴선수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 컨설팅 지원
 - * 선수시절부터 체육 분야 진로상담 실시 / 진로교육 대상을 중학교 운동부, 운동부 지도자, 학부모까지 확대 / 은퇴선수 진로지원 광역거점센터 '18년 5개소

14 | 소방관 · 경찰 · 군인 · 국가유공자

- ◆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 ·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군 복무여건을 사회 변화에 맞게 개선했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습니다.

소방관 · 경찰 처우 개선

소방직 국가직화로 소방인력 · 장비 · 처우 개선이 가능해졌습니다.

- 지역간 소방인력 · 장비 · 시설 등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 * 소방 국가직화 관련 법률(6개) 개정, '20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소방관 인력 총원 및 소방장비 표준규격 개발
 - * 인력 증원 : ('17년) 1,500명 → ('18년) 3,404명 → ('19년) 3,707명
 - * 소방장비(소방차량, 개인보호장구 등) 표준규격 개발 : ('17년) 6종 → ('18년) 10종 → ('19년) 13종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화상 등 근무환경에 따른 특수진료 중심의 복합치유센터 건립 추진

경찰 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습니다.

- 민생치안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인력 지속 증원
 - * 인력 증원 : ('17년) 1,870명 → ('18년) 2,057명 → ('19년) 4,582명
- 위험직무 순직범위 확대, 재활치료비 지원 등 순직 · 공상 경찰관 지원 강화
 - * 순찰 · 신고출동 등도 위험 순직범위에 포함('18.3월), 재활 등 요양비의 50% 지원제도 신설('19.5월)
- 현장법률 365상담센터 운영 등 경찰관의 법 집행을 뒷받침하는 법률지원체계 확립
 - * 경찰관 직무집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를 재산에서 생명 · 신체상 손실로 확대('19.6월)

군인 복무여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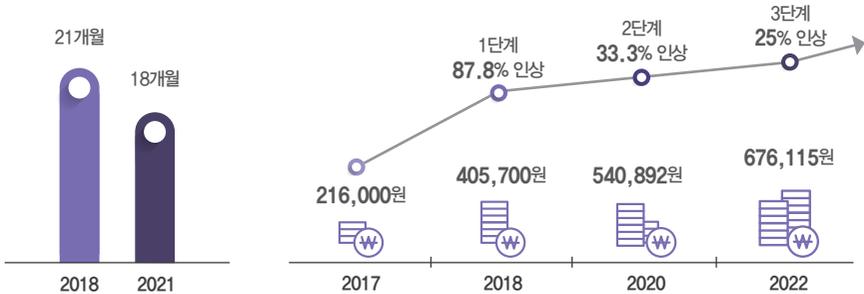
병사 의무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여 한 학기 조기 복학이 가능해졌습니다.

- 청년들의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복무기간 3개월 단축
 - * (육군 · 해병대) 21 → 18개월, (해군) 23 → 20개월, (공군) 24 → 22개월 (공군은 추후 병역법 개정으로 1개월 추가 단축 추진 예정)
 - * '19.11.9. 전역일 기준 31일 단축('21.12.14. 완료)
-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최소화, 조기 사회진출 가능
 - * 복학 및 취업 시기 6개월(1학기) 단축이 가능하여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

병사 봉급을 인상하여 전역 시 목돈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
 - * 병장 기준 : 40만 5,700원('18년) → 54만 900원('20년) → 67만 6,100원('22년)
- 고(高)이율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18.8월),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
 - * 5% 이상 금리, 비과세 혜택, 월 최대 40만원까지 적립 가능
 - * 전역 시 1학기 등록금 수준(400여만원)의 목돈 마련 가능('20년 입대인원 기준)

〈 병사 복무기간 단축(육군 기준) 〉 〈 병사 봉급 인상(병장 기준) 〉



군 복무 중 대학 학점과 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50%)과 모바일 웹 구축 등 수강여건 개선으로 참여병사 60% 증가
 - * 원격강좌 참여병사 : ('17년) 9,662명 → ('19년) 15,358명
-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제도 시행으로 학점취득 기회 확대
 - * '19.10월 현재 23개 대학 참여 확정,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등으로 참여대학 확대 예정
- '19년부터 어학·자격증 응시료, 학습 교재비 지원 등을 위해 병 개인별 5만원 내에서 자기개발비용 지원
 - * 1인당 지원한도 : ('19년) 5만원 → ('20년) 10만원 / 지원 예산 : ('19년) 20억원 → ('20년) 80억원

병사 휴대전화 사용 및 평일 외출 시행으로 가족·친구들과의 수시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시범운영 대상 전군으로 확대('19.4월)
 - * 통신사와 협의, 3만원대의 병 전용 요금제 신설로 장병 부담 최소화
 - * 외부와의 소통(66% → 96%) 개선, 군 생활에 대한 우울·불안·소외감 감소
-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평일 일과 후 외출 시행('19.2월 전면 시행)
 - * 일과 중 작전 및 교육훈련에 매진하고 일과 후 자기개발활동 및 충분한 휴식여건 보장
 - * 가족과 친구 면회, 병원진료, 부대원 간 단결활동을 통해 단결력과 복무의욕 고취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완치될 때까지 무상 치료를 보장했습니다.

- 현역병이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해 완치까지 국가가 책임
 - * 기존 6개월만 전역 보류 → 완치 시까지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안) 국회 제출('18.9월)
- 현역병의 민간병원 치료비용 국가 지원 확대
 - * 「병사 군 단체보험」을 통해 본인부담금 지원('21년 시행 예정)
- 공무상 부상을 당한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18.3월)
 - * 직업군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료선택권 보장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 강원권 제대군인지원센터 신설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접근성 제고('19.7월)
 - * ('04~'08년)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 ('11~'14년) 경기 북부, 경기 남부 → ('19.7월) 강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조직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17.7월)으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보훈예우국 신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께 국가에서 명패를 달아 드립니다.

- 정부 주도로 지자체와 협업하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추진('18.11월)
 - * 독립·호국·민주 국가유공자 17만 928명에게 증정('19.11월 기준)

품격 있는 장례의전으로 마지막까지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와 함께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직접 방문하여 증정
 - * 「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 제정('18.6월) 이후 1만 7,920명 지원
- 과산호국원 개원('19.10월), 임실호국원 확충('17.7월)으로 안장수요 증가 대비 및 접근 편의 제공
 - * 과산호국원 : 2만 447기(봉안담 1만 9,368기, 잔디장 1,079기), 임실호국원 : 1만 2,240기(봉안담)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월 33~46만원, '18.1월)
 - * ('18.1월) 3,007명 → ('19.10월) 1만 8,716명으로 6배 이상 증가, 1,362억원 지원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지원 확대('18.1월)
 - * (중전) 대표 유족 1인 한정 → (변경) 영주귀국 유족 세대주 모두에게 지원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 확대

* 포상인원 : ('16년) 312명(여성 14명) → ('17년) 269명(여성 11명) → ('18년) 355명(여성 60명) → ('19년) 647명(여성 113명)

■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을 통한 독립정신 계승 및 확산 노력

* 충청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복원('19.3월),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19.4월) 등 26개 사업 실시

참전유공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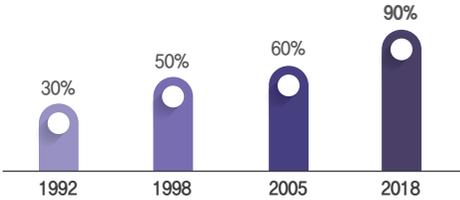
■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 및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확대, 참전명예수당 인상

* 진료비 : ('16년) 60% 감면, 89,469명 288억원 수혜(1인당 약 32만원)

→ ('18~'19.6월) 90% 감면, 17만 2,341명 913억원 수혜(1인당 약 53만원)

* 참전명예수당 : ('16년) 월 20만원 → ('17년) 월 22만원 → ('18년) 월 30만원

〈 진료비 감면율 〉



UN 참전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 UN 참전용사자랑찬 초청행사(7회, 650여명) 및 참전국별 현지위로·감사행사(22개국, 1만 8천명)

잘 알려지지 않은 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부마민주항쟁



국민 모두가 누리는 기분 좋은 변화

1.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었습니다.
2. 가계생계비가 대폭 경감되었습니다.
3. 일자리가 늘어나고 질이 좋아졌습니다.
4. 재해와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5. 누구나 어디서나 품격 있는 삶이 보장됩니다.
6. 보금자리 걱정이 줄어듭니다.
7. 미세먼지, 반드시 잡겠습니다.
8.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9. 세계가 대한민국을 인정합니다.

01 |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었습니다.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급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 수준을 확대했습니다.

- 초음파(상복부 '18.4월, 하복부·비뇨기 '19.2월), MRI(뇌·뇌혈관 '18.10월, 두경부 '19.5월) 등 건강보험 적용
-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부담 해소를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18.1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18.7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추진
* 4.2만개 병상 참여중('19.8월말 기준/누적), '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
-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대책 시행 전 대비 1/2~1/4 수준으로 경감, 건강보험 보장률* 67.2% ('18년, 종합병원급 이상 기준)로 지속 상승 중
* ('16년) 62.6% → ('17년) 64.4% → ('18년) 67.2%(잠정)
- 국민 의료비 총지출 중 국가부담비중 증가('16년 59.1% → '18년 59.8%, 잠정)



대상별 특성에 맞춘 건강보험 혜택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 노인 :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17.11월) 및 치과 임플란트('18.7월) 본인부담률 인하 (50% → 30%)
* 틀니 환자 의료비 부담(평균) : 65만원 → 39만원(1억당) / 임플란트 환자 의료비 부담 : 62만원 → 37만원(1개당)
- 아동 :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10~20% → 5%, '17.10월),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평균 10만원 → 2.5만원, '19.1월)
- 여성 : 난임수술비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 30%, '17.10월), 지원 횟수 확대(신선배아 4회 → 7회 등) 및 연령 제한 폐지('19.7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및 대상 확대(소득하위 50%, 모든 질환, '18.7월)
* 입원의료비 및 고액 외래의료비(암, 희귀난치질환 등)를 소득에 따라 비급여 등 본인부담액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02 | 가계생계비가 대폭 경감되었습니다.

- ◆ 교통비·통신비 등 가계비용과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등을 통해 가계부채 위험을 해소하겠습니다.
- ◆ 서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계비용 경감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렸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또는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하고, 알뜰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카드사 추가 할인혜택 제공(10%)
* '18년 세종·울산·전주 시범 도입 → '19년 시범사업 11개 지자체를 시작('19.6월~)으로 확대 시행
: 초기 성과 분석 결과 이용자 월 평균 교통비 10,741원 절감 / 직장인, 20~30대, 여성에게 높은 호응
- 서울외곽 등 6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18.4월), 설·추석·동계올림픽 기간 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시행('17.10월)
* 서울외곽(33.3% ↓), 서울춘천(16.2% ↓), 수원광명(10.3% ↓), 설·추석·동계올림픽 기간(약 4억 904만명 혜택)

연간 2조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 단말기지원금 대신 받는 월 요금할인을 상향(20% → 25%, '17.9월)
* 연간 요금할인액 규모 : ('17.8월) 1.49조원 → ('19.8월) 3.08조원(1.59조원 ↑)
- 저소득층 대상 요금감면 규모 월 11,000원 상향('17.12월)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신규로 월 최대 11,000원 이동통신요금 감면('18.7월)
* 연간 감면 혜택('19년 기준) : 저소득층·어르신 316만명 대상 연간 5천억원 감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줄었습니다.

- 우대수수료 적용범위를 연매출 5억원 이하('17.7월)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19.1월)
*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중 우대가맹점 비중: ('17.7월) 84% → ('19.1월) 96%
- 온라인사업자,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 적용('19.1월)
* '19.1월 기준 우대수수료 적용 현황: 온라인사업자 57.5만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명

교육비 경감

누리과정(만 3~5세)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 대상 보육료 및 학비 지원
 - * 어린이집 지원 : ('17년) 8,600억원(41.2%) → ('18년) 2조 586억원(100%) → ('19년) 1조 9,812억원(100%)
 - * 유치원 지원 : ('17년) 1조 8,533억원(100%) → ('18년) 1조 8,341원(100%) → ('19년) 1조 7,628억원(100%)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전체 269만명, '19.9월)
 - * ('18.9월) 소득·재산 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 → ('19.1월) 소득·재산 요건 폐지 → ('19.9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로 고교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부담 경감
 - * 도입일정 : ('19년 하반기) 3학년, ('20년) 2·3학년, ('21년) 전 학년
 - * 지원사항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서 대금
- 고교 무상교육 실시 근거 및 소요재원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 *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9.10월)

대학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 * ('18년) 국·공립대학 전면 폐지 → ('19~'21년) 사립대학 단계적 감축 → ('22년까지) 사립대학 완전 폐지
 - * 입학금 폐지 근거 마련(「고등교육법」 개정, '19.10월)
- 반값등록금(사립대학 평균 기준 50% 368만원) 확대
 - * ('17년) 52만명 → ('18년) 66.5만명 → ('19년) 68.9만명
- 대학교 기숙사 수용인원 확대
 - * ('17년) 2만 2,718명 → ('18년) 2만 9,166명 → ('19년) 3만 6,612명
 - * ('19년) 기숙사 신규확충 : 7,446명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를 관리하여 국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가계부채 증가율 안정화

* 가계부채 증가율(전년 대비, 한은) : ('16년) 11.6% → ('17년) 8.1% → ('18년) 5.9% → ('19.2분기) 4.3%

■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비중 : ('13년) 15.9/18.7% → ('16년) 43.0/45.1% → ('19.1분기) 46.8/52.1%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겠습니다.

〈 금융채무 불이행자 감소 〉

■ 공공·민간 부문 소멸시효 완성채권 지속적 소각

* 소각 채권 현황('17~'19.6월) : 365만명, 37.1조원

■ 생계형 장기 소액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 채무조정 현황('17~'19.6월) : 64.1만명, 4.3조원 면제·감면

■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 : ('17년) 94.2만명 → ('19.6월) 89.8만명



서민금융 지원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강화했습니다.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48개)를 통해 원스톱 서민금융지원 서비스 제공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실적(연간) : ('17년) 90.5만건 → ('18년) 97.7만건 → ('19.6월) 53.8만건

■ 서민을 위한 저금리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증대

*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연간) : ('16년) 5조원 → ('17년) 6.9조원 → ('18년) 7.2조원 → ('19.6월) 3.8조원

* 서민금융 수혜자 수(연간) : ('16년) 49만명 → ('17년) 55만명 → ('18년) 58.4만명 → ('19.6월) 29.9만명

중금리 대출 요건을 완화하여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사잇돌대출 지원조건 완화, 민간 중금리 취급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중금리 대출 활성화

* 중금리 대출 연간 공급액 : ('16년) 1.3조원 → ('17년) 3.7조원 → ('18년) 6조원 → ('19.3월) 1.8조원

03 | 일자리가 늘어나고 질이 좋아졌습니다.

◆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 고용률은 67.3%로 역대 최고 수치(10월 기준), 취업자 수는 41.9만명 증가('19.10월)
 - * 고용률(15~64세) : ('16.10월) 66.5% → ('17.10월) 67.0% → ('18.10월) 66.8% → ('19.10월) 67.3%
 - * 취업자 증감(15세 이상) : ('16.10월) 22.7만명 → ('17.10월) 28.1만명 → ('18.10월) 6.4만명 → ('19.10월) 41.9만명
- 실업률은 3.0%로 2013년 이후 최저 실업률('19.10월)
 - * 실업률(15~64세) : ('16.10월) 3.3% → ('17.10월) 3.2% → ('18.10월) 3.5% → ('19.10월) 3.0%

청년·여성·고령층의 고용 기회가 확대됐습니다.

- 청년 고용률은 44.3%로 전년 동월 대비 1.4%p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19.10월)
 - * 청년 고용률(15~29세) : ('16.10월) 41.9% → ('17.10월) 41.8% → ('18.10월) 42.9% → ('19.10월) 44.3%
 - * 청년 실업률(15~29세) : ('16.10월) 8.5% → ('17.10월) 8.6% → ('18.10월) 8.4% → ('19.10월) 7.2%
- 여성 고용률은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해지며 증가세 지속
 - * 여성 고용률(15~64세) : ('16.10월) 56.5% → ('17.10월) 57.4% → ('18.10월) 57.5% → ('19.10월) 58.4%
 - * 여성 경제활동참여율(15~64세) : ('16.10월) 58.6% → ('17.10월) 59.2% → ('18.10월) 59.6% → ('19.10월) 60.2%
- 65세 이상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상승
 - * 65세 이상 고용률 : ('16.10월) 32.6% → ('17.10월) 32.8% → ('18.10월) 33.5% → ('19.10월) 35.3%
 - * 노인일자리('16년) 41만개 → ('17년) 46만개 → ('18년) 51만개 → ('19년) 64만개 목표

지역경제 돌파구가 되는 새로운 지역일자리 모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발표('19.2월) 및 6개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약 체결**
 - * 지자체·중앙정부가 맞춤형 패키지 지원(보조금·자금 지원, 세제 지원,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 정주여건·근로환경 개선 등)
 - ** 광주('19.1월), 밀양('19.6월), 대구('19.6월), 구미('19.7월), 강원('19.8월), 군산('19.10월) 등 6개 지역

일자리 질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근로자 비중 지속 확대
 -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 : ('16.10월) 66.4% → ('17.10월) 67.3% → ('18.10월) 68.4% → ('19.10월) 69.6%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지속 증가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16년) 1,250만명 → ('17년) 1,281만명 → ('18년) 1,316만명 → ('19.1~10월) 1,363만명

04 | 재해와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졌습니다.

- ◆ 국민 안전과 직결된 소방·경찰 인력을 2022년까지 4만 3천명 증원하고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 ◆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살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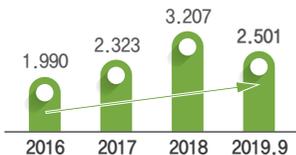
대형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강원 고성산불('19.4월) 13시간 만에 조기 진화
 - *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중대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18.12월), 소방직 국가직 전환('19.11월 입법)
 - * 빠른 소방 비상 대응 3단계 발령으로 소방차 872대, 소방관 3,251명, 헬기 22대 등 소방력 집중
- 지진관측소 108개소 확충, 규모 5.0 이상 지진의 경보시간 단축
 - * 지진 조기경보 목표 시간 : ('16년) 50초 이내 → ('18년) 25초 이내
-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확대 및 내진성능 확보율 향상
 - * 내진보강 대상 및 내진성능 확보율 : ('16년) 10만 5,448개소, 43.7% → ('18년) 18만 7,950개소, 62.3%
- 해외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해 영사조력 등 현장대응
 - * 헝가리 사고 시 신속한 실종자 수색 및 선체 인양('19.5~7월), 골든레이호 사고 시 고립 선원 전원 구조('19.9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소방·경찰 인력을 충원하고, 소방청·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켰습니다.

- 소방·경찰 인력 1만 8,438명 충원('17~'19년)
 - * 소방관 8,611명, 경찰 8,509명, 해양경찰 1,318명
- 소방인력·장비·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
 - * 소방 국가직화 관련 법률(6개) 개정으로 '20.4.1일 시행 예정
- 화재현장 및 응급상황 대응력 향상을 위한 소방청 독립('17.7월)

〈 화재현장 인명구조 실적(명) 〉



〈 심정지 환자 소생률(%) 〉



- 해양주권 수호 및 해양안전 강화를 위한 해양경찰청 독립('17.7월)



재난관리체계의 내실을 더욱 다졌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를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18.5월)
- 주택 재난피해 지원금 44% 상향
* (전파) 900만원 → 1,300만원 / (변파) 450만원 → 650만원('18.7월)
- 지진·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 발송 단계 간소화
* 기상청·행정안전부 → 기상청 직접 발송('18.6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 음주운전 처벌('18.12월) :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음주운전 기준('19.6월) : (면허정지) 0.05% → 0.03% 이상 (면허취소) 0.10% → 0.08% 이상
- 도심 내 제한속도 하향(60 → 50km/h),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60개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 29년 만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19.1월)
* 위험의 외주화 방지, 원청의 안전·보건책임 강화, 사업주 처벌 강화, 특수형태근로자를 보호대상에 포함 등
- 예방중심 집중관리를 통해 건설현장 사망자 수 감소
* 건설업 사망자 수 : ('16년) 499명 → ('17년) 506명 → ('18년) 485명 → ('19.9월) 336명
* 타워크레인 사망자 수 : ('16년) 10명 → ('17년) 17명 → ('18년) 0명 → ('19.9월) 3명

자살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권역별 응급개입팀 설치,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등 24시간 365일 대응체계 구축('20년)
- 지역사회 생명지킴이*, 1차 의료기관 등을 활용하여 고위험군 발굴 및 상담치료 연계 강화
*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방문 간호사 등을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로 양성('18.1~'19.7월 167만명)
-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를 위한 「자살예방법」 개정('19.1월)
*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처벌규정(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신설, 긴급구조 대상자 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등 제공,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신설 등 포함

감염병 · 전염병

메르스를 성공적으로 이겨냈습니다.

- '18.9월 메르스 확진자 발생 시 총력 대응으로 추가 확산 없이 38일 만에 상황 종료
* 메르스 상황 비교('15년→'18년) :
(환자수) 186명→1명 / (사망자수) 38명→0명 / (격리자수) 16,693명→2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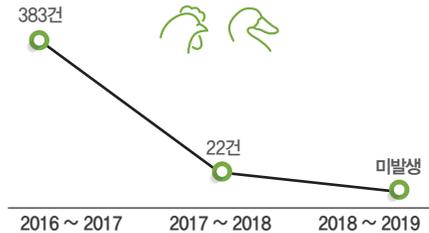
구제역 등 가축질병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 구제역 : '19.1월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 총력 대응으로 역대 최단기간(4일) 방역조치
* ('15년) 185건 → ('16년) 21건 → ('17년) 9건 → ('18년) 2건 → ('19년) 3건
- AI(조류인플루엔자) : 방역취약 분야 중점관리 등 사전 예방조치 강화로 '18.3월 이후 현재까지 미발생
* 오리 사육 제한(203개 농장), 철새 AI 항원 검출지역(41개 시·군·구) 소독 강화, 거점소독시설 사전 운영(190개소), 중앙점검반 방역점검(5,880개소) 추진 등
* ('16/'17년 동절기) 383건 → ('17/'18년 동절기) 22건 → ('18.3월~현재) 0건

〈 구제역 발생 건수 〉



〈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건수 〉



최초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도 철저히 막아내겠습니다.

- 경기 파주에서 최초발생('19.9월)하였으나, 발생 시·군의 모든 돼지 수매·살처분, 중점관리·완충지역 설정 등 특단의 대책으로 경기북부 지역 이외 추가확산 저지
* 중점관리지역 : 경기, 강원, 인천 / 완충지역 : 고양, 포천, 양주, 동두천, 철원

05 | 누구나 어디서나 품격 있는 삶이 보장됩니다.

- ◆ 걸어서 10분 이내에 공공도서관과 체육관이 들어섭니다.
- ◆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 ◆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SOC 확충을 추진합니다.

- 일상생활 필수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을 통한 삶의 질 제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활SOC 3개년 계획안 발표('19.4월)
* 여가활력, 생애돌봄, 안전·안심 등 3대 분야에 향후 3년간 국비 30조원 투입('20년 예산안에 10.4조원 반영)
- 다수 공공시설을 한 건물에 모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
* '20년 사업으로 17개 광역, 172개 기초자치체 대상 289건 선정

구도심 재생을 위해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이 주도하여 쇠퇴한 구도심을 혁신거점 공간으로 조성, 노후 주거지에는 기초적 생활인프라 확충
* 265개 뉴딜사업에 807개의 생활SOC 공급 계획 반영

〈 도시재생 뉴딜 선정 지역 〉



- '17년 선정사업 등 53곳 착공, '18·'19년 대상지 대폭 확대
 - * 뉴딜 사업대상지 : ('17년) 68곳 → ('18년) 99곳 → ('19년) 98곳 선정
- 주민체감형 시설 368개 집중관리, 자율·가로주택 정비 사업요건 완화 등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화
 - * 자율주택 정비사업 대상 확대(단독·다세대 → 연립주택 포함), 자율주택 조건 완화(나대지 사용 가능 등), 가로주택 정비 면적 확대(1만㎡ → 2만㎡), 소규모 정비사업자 지원(교육·초기설계비) 등
 - * (가로주택 정비사업) 82개 조합 구성, 8개 사업 착공, 1개 준공
 - (자율주택 정비사업) 69개 주민합의체 구성, 12개 사업 착공, 3개 준공

농어촌의 교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공공형 택시(100원 택시) 운행지역 126개 시·군 ('18년) → 135개 시·군('19년)으로 확대
 - * 수혜 대상인원이 증가('18년 36만명 → '19년 40만명)했으며, 연간 이용객 수 또한 '19.8월 288만명으로 '18년 동월 210만명 추월
-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항로 운영을 위해 준공영제 사업 지원대상 확대
 - * 지원항로 : ('18년) 9개 → ('19년) 13개
- 도서지역의 생활연료 등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시행('19.6월) 및 도서민 생활구간 운임 할인 확대
 - * ('18년) 40% → ('19년) 70%
-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과 노후·불량 주택 정비
 - * 빈집정비(누계) : ('18년) 15만 2,000동 → ('19.8월) 15만 6,405동
 - * 주택개량(동, 누계) : ('18년) 7만 7,930동 → ('19.8월) 8만 1,102동
- 어촌 재생, 해양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
 - * ('19년) 70개소 → ('20년) 70개소 이상 → ('22년까지) 300개소

〈어촌뉴딜 300 사업대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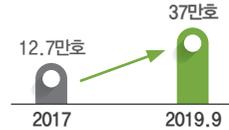
06 | 보금자리 걱정이 줄어듭니다.

-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2022년까지 장기 공적임대주택 90만 1천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

-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 ('17년) 12.7만호 → ('19.9월) 37만호
-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마련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화하겠습니다.

〈 등록민간임대주택 확충 〉

- 무주택자 우선추첨 등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주택구입 대출 규제 강화 등 투기수요 억제
* 민영주택 무주택자 당첨비율(서울) : ('17년) 74.2% → ('19년) 97.5%
- 임대료 인상 제한, 의무 임대기간 등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 민간임대주택 50% 증가
* 등록 민간임대주택 : ('17년) 98만호 → ('19.9월) 146.7만호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선 및 적용 지역 지정('19.11월)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 완화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 :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기숙사형 청년주택, 산단형 행복주택,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등
- 신혼부부 : 신혼희망타운, 신혼 특별공급 2배 확대, 구입·전세자금 기준 확대
* 지원실적('18~'19년) : (구입자금) 7조 7,470억원 / (전세자금) 7조 3,363억원
- 어르신 :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 등 어르신 주거 지원 강화
* 공급실적('18~'19년) : 어르신 전용 공공임대주택 1.9만실 공급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수급가구 100만 가구 이상 지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8.10월),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향상
* 주거급여 : (수급가구) ('18.9월) 83만 가구 → ('18.12월) 94만 가구 → ('19.10월) 102.5만 가구 (지원금액) ('17년) 11.7만원 → ('18년) 12.9만원 → ('19.9월) 13.4만원

07 | 미세먼지, 반드시 잡겠습니다.

- ◆ 2024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농도를 35% 이상 저감하겠습니다.
- ◆ 한·중 협력을 내실화하여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미세먼지(PM_{2.5}) 환경기준을 선진국(미국·일본) 수준으로 강화('18.3월)
* (일평균) 50 $\mu\text{g}/\text{m}^3$ → 35 $\mu\text{g}/\text{m}^3$ / (연평균) 25 $\mu\text{g}/\text{m}^3$ → 15 $\mu\text{g}/\text{m}^3$
- 사회재난으로 미세먼지 포함 등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한 8법 제·개정('19.3~4월)
* 제정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개정 : 「재난 및 안전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학교보건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정부·민간합동 국가기후환경회의(대통령 직속, '19.4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총리실, '19.2월) 설치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간이 참여하는 비상저감조치 전국 확대 실시('19.2월~)
*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단축 등(전국 미세먼지 일평균 배출량(888톤)의 약 10.7%(95톤) 저감 효과)
- 12월~3월 고농도 빈발시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계절관리제 도입('19.12월 시행)
* 계절관리제 :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제안으로서 고농도 시기에 평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조치로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방안

4대 핵심배출원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발전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보철(3월~6월) 가동중단('17.5월~), 4기 폐쇄('19.9월)
*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 ('17년) 2.7만톤 → ('18년) 2.3만톤
- 산업 :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 ('17년) 5.2만톤 → ('19년) 3.8만톤(예상)
* 전기집진시설, 흡수흡착시설, 여과집진시설 등 설치 지원('19년, 1,098억원)
- 수송 : 도로 및 해양 부문 미세먼지 감축 강화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으로 노후 경유차 25% 감소 : ('17년) 286만대 → ('19.11월) 213만대
* 저공해차 보급 : ('17년) 35만대 → ('19.11월) 60만대
* 국내 최초 경찰 수소전기버스 현장 배치('19.10월), 모든 경찰버스 수소전기버스로 단계적 전환
- 생활 : 비산먼지 감축을 위한 도로청소차량 보급 확대
* 분진흡입차량 등 : ('17년) 1,174대 → ('19.11월) 1,494대 보급

발전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3~6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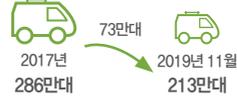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총량제
대상 물질
먼지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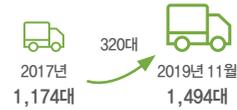
노후 경유차 감축



저공해차 보급 확대



도로청소 차량 보급 확대



수송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수도권 ('17년) →
수도권 외 권역 확대 ('20년)

생활

도로 청소차량
2배 확충

1,008대
('16년)



건설공사장 집중점검,
농촌 불법소각 방지 등
비산먼지·생물성
연소대책 강화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특수학교 23만 9,438개실(87.9%) 공기청정기 설치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 ('17년) 206대 → ('18년) 1,781대 → ('19.11월) 1,815대
- 취약계층 집중 이용시설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19.8월)
*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병원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한·중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한·중 정상회담, 한·중 총리회담을 통해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의
* 한·중 정상회의('17.12월, '18.11월, '19.6월), 한·중·일 정상회의('18.5월), 한·중 총리회담('19.3월)
- '맑은하늘(청천) 계획' 이행방안 합의('19.11월)
* 정책·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 협력 분야 세부 이행계획 및 점검체계 수립
- 한·중 환경협력센터 출범(베이징, '18.6월)
* 대기질 개선 협력사업 등 한·중 환경협력계획 세부사업(17개) 확정, 한·중 환경장관회의('19.2월, 11월) 등 개최, 청천계획 총괄 관리 및 이행사항 점검 전담
-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확대('17년 0건 → '19.11월 8건, 227억원)
* 중국 내 제철소, 석탄발전소 등에 한국의 대기오염 방지 기술 등 적용
- 한·중 간 대기질 예·경보 정보공유 합의
* 한국 17개 시·도 ↔ 중국 11개 성·시('19.12월 시범운영 개시)

08 |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되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 ◆ 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길을 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개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했습니다.

- 남·북·미 정상회담('19.6월, 판문점), 한·미 정상회담('19년 3회, 총 9회) 등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당사자로서 적극적 역할 수행
-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남북 간 상시 연락채널을 마련했습니다.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18.9.14), 24시간 365일 상시적 소통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 포함, 개소 이후 남북 간 협의 상시 진행

DMZ 일대 모든 적대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했습니다.

- 지상 : 완충지대 내(MDL 기준 남북 5km) 포병사격·연대급 이상 기동훈련 전면 중지
* '9·19 군사합의' 체결 이전 비무장지대 내 총격·포격도발 총 100여회 발생
- 해상 : 완충구역 내(서해: 초도~덕적도, 동해: 통천~속초) 포병·함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지와 포문 폐쇄 및 포구·포신 덮개 설치
* 과거 연평·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 다수의 무력충돌 발생
- 공중 :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
* 우리측 지역의 정찰·감시활동을 위해 북측이 주기적으로 침투시켰던 북한 무인기 운용 全無

DMZ 평화적 이용 기반 구축

화살머리고지 일대 전사자 유해발굴로 6·25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 남북공동 유해발굴지역 지뢰 제거 및 남북 간 MDL 관통도로 개설
* (지뢰 제거) 우리측 148발, 북측 3,846발 / (도로개설) 폭 12m, 길이 3km

- 남북공동 유해발굴 사전 준비차원에서 우리측 지역 지뢰 제거 및 기초 발굴작업 우선 진행, 6·25전쟁 후 66년간 발굴하지 못한 DMZ 내 국군 유해 발굴
* (19.10월 기준) 유해(200여구 추정, 1,738점) · 유품(50,234점) · 지뢰(410발) · 불발탄(5,133발) 식별

JSA 비무장화를 실현했습니다.

- JSA 비무장화 완료 및 관광객 자유왕래를 위한 기반(CCTV 재배치, 공동근무초소 설치 등) 구축 완료
* JSA 내 지뢰 제거, 초소 · 화기 철수 및 인원 조정, 공동 현장검증 등 조치 완료(18.10월)
- 남북 간 관광객 자유왕래 사전 준비차원에서 남측지역 견학 우선 재개
* (19.10월 기준) 내 · 외국인 JSA 견학 실시(448회, 22,000여명)

GP 시범철수 등 중무장된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 DMZ 내 남북 각 11개 GP 시범철수(철거) 완료 및 현장공동검증 실시
* UN 등 국제사회에서 군비통제 추진 관련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
- '9·19군사합의 이행을 토대로 분단의 상징 DMZ 지역에 평화의 길 조성
* 고성(19.4월), 철원(19.6월), 파주(19.8월) 등 3개 구간을 국민에 개방(19.10월 기준 1만 5,000여명 방문)

평화경제 기반 구축

다양한 남북 교류 ·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8년 경의선 · 동해선 철도 · 도로 현대화 합의에 따른 북측구간 공동조사 시행 및 착공식 개최, '19년 남북 공동조사 결과보고서 상호 교환
* 경의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18.8월), 동해선 도로 현장방문(18.12월), 철도 현지 공동조사(18.11~12월), 철도 ·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18.12.26) 등
* 도로 실무접촉(19.1.31), 철도 · 도로 자료교환(19.1.31, 2.25)
- 한반도 산림녹화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목표로 남북 산림협력 적극 추진
* 제1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18.7.4), 금강산 현장방문(18.8.8), 제2차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18.10.22), 개성 왕건 왕릉 일대 공동방제(18.11.29), 북측 산림 관련 시설 현장방문(18.12.11~13, 평양)

평화경제가 한 단계씩 열리고 있습니다.

-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로 서해5도 어장 확장(245km²), 조업시간 연장(1시간) 등 조업규제 완화
* 서해5도 어장 : (기존) 1,614km² → (확장) 1,859km²(연평어장 90km² 확장, D어장 155km² 신설)
* 조업시간 : (기존) 주간만 허용 → (연장) 야간 1시간 추가 허용(일출 전, 일몰 후 각 30분씩)

09 | 세계가 대한민국을 인정합니다.

◆ 경제력과 민주주의 발전으로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0위('18년 GDP 기준, IMF)로 수출규모 세계 6위,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달성 전망
- 세계 7번째, 식민지 벗어난 국가 중 최초로 '30-50클럽' 가입
 - * 30-50클럽 : 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
 - * '18년 1인당 국민총소득 33,434달러

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19년 국가경쟁력평가 결과(WEF), 우리나라는 2년 연속 2계단씩 상승
 - * 우리나라 순위 : ('17년) 17위 → ('18년) 15위 → ('19년) 13위
 - * '거시경제 안정성', 'ICT 보급' 부문은 2년 연속 1위, '혁신역량' 부문도 2계단 상승한 6위
- '19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90개국 중 5위 기록
 - * '14년 이후 6년 연속 Top5 달성, G20 국가 중 1위, OECD 국가 중 3위
 - * 주요국 순위 : 뉴질랜드 1위, 싱가포르 2위, 홍콩 3위, 덴마크 4위, 미국 6위, 영국 8위 등
 - * 우리나라 순위 : ('10년) 16위 → ('11년) 8위 → ('12년) 8위 → ('13년) 7위 → ('14년) 5위 → ('15년) 4위 → ('16년) 5위 → ('17년) 4위 → ('18년) 5위 → ('19년) 5위
- 국가신용등급 역대 최고 유지(AA등급, S&P)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었습니다.

- 세계 언론자유지수가 4년 연속 상승, 180개국 중 41위로 참여정부 수준 회복
 - * ('16년) 70위 → ('17년) 63위 → ('18년) 43위 → ('19년) 41위
-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순위 (일본 67위, 중국 177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 부패인식지수(CPI) 역대 최고점수 달성, 순위 7계단 상승
 - * ('16년) 52위 → ('17년) 51위 → ('18년) 45위
- OECD 정부신뢰도 순위 10계단 상승
 - * ('17년) 32위 → ('19년) 22위



[부록]

한국 경제 바로 알기

튼튼한 대한민국 경제

- ◆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고합니다. 세계 경제가 동반 둔화(Synchronized slowdown)하는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견고한 대외건전성

-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 지속
외환보유액 세계 9위

외환보유액
9위



■ 양호한 재정건전성

-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규모가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양호

일반정부 부채
네 번째로 양호



■ 141개국 중 13위의 국가경쟁력

- ('17년) 17위
(‘18년) 15위
(‘19년) 13위

국가경쟁력
13위



■ 2019년 성장률 전망은 '30-50클럽' 국가 중 2위

- OECD : 2.1%(19.9월), IMF : 2.0%(19.10월)

성장률 전망
2위



→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적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재정건전성

- ◆ 재정건전성은 세계적으로도 양호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6년 연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20년 39.8%인 국가채무(D1) 비율을 '23년까지 40% 중반 수준 이내로 관리
- '23년 국가채무 비율 : 46.4%('19 ~ '23 국가재정운용계획)



-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OECD 32개국 중 4위



- 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6년 연속 감소
- ('12년) 220% → ('18년) 155%

→ 경제 활력을 높이고 포용국가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등 재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입 확충, 지출 구조조정 등의 재정혁신을 보다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국민과 함께 전화위복의 기회로① 민관 협업 통해 전방위적으로 대응

- ◆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 되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정부·유관기관·협회 간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해 총 1,100여 건의 기업 현장어로 해소



- 100+α 핵심 품목을 선정해 집중 투자
- ('19년) 예산 8,000억원 → ('20년)안 1조 7,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19.9.11일)



- 수출규제 대응 컨트롤 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본격 가동 ('19.10월~)

→ 일본과 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국민과 함께 전화위복의 기회로②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업그레이드

- ◆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전방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불화수소와 레지스트 등 핵심 품목의 공급이 안정화되고 투자가 확대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3종 세트 마련

-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모델 발굴·지원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 신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정비



■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 안정화

- 미국, 중국, 유럽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
- 공장 증·신축 등 국내 생산 능력 확대
- 핵심 품목 생산시설에 대해 적극 투자유치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 아래 반드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교역 다변화와 신시장 개척

- ◆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 나서는 한편, 신남방국가들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국가 간 교역을 다변화하고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 5대 신규 FTA 추진으로 교역안정화 및 신시장 개척의 발판 마련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 한·영 FTA
- 한·중미 FTA
- 한·이스라엘 FTA



■ 신남방 11개국 순방 조기 완료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신남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계 강화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 삼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성과를 내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먹거리①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 발굴에 총력

- ◆ 데이터·AI, 5G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핵심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육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 시장 규모 확대

- ('17년) 4,547억원
- ('18년) 5,843억원

■ 세계 최초 5G 상용화

- ('19.4월) 27만명
- ('19.9월) 346만명

■ 핵심 신산업 분야에 대한

주요 기업의 중장기 투자 계획

- 미래차
: '30년까지 7조 6,000억원
- 시스템반도체
: '20년까지 133조원
- 바이오헬스
: '30년까지 40조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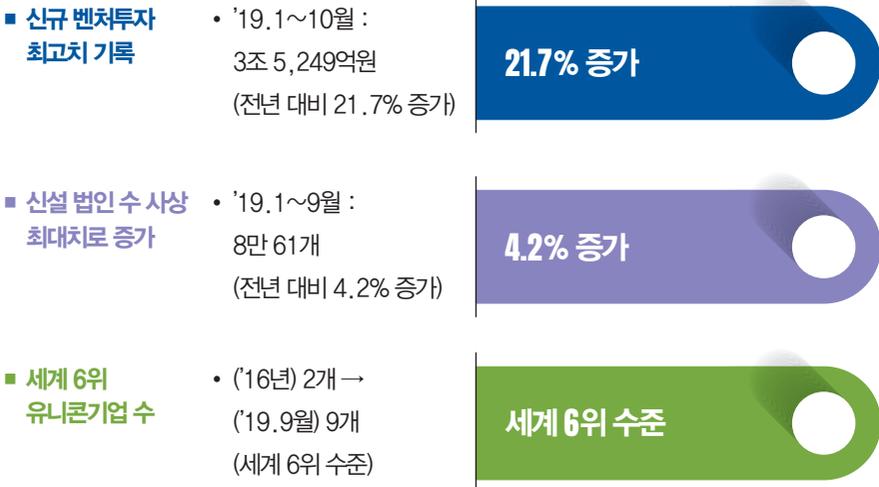


→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의 빠른 성과를 가시화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먹거리②

새로운 도전을 위한 제2벤처 붐

- ◆ 2019년 3월, '제2벤처 붐' 확산을 위한 대책을 세워 발표했습니다.
이후 창업·벤처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는 등 제2벤처 붐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제2벤처 붐 대책 관련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창업·벤처 성과를 확산하고,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먹거리③

수요자 중심의 규제 시스템 전환

- ◆ 신기술 · 신산업에 대한 도전이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거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 '19년 규제 샌드박스 사례
목표 100건 조기 달성
(180건, '19.11월 기준)

- 규제 샌드박스 '1+4법' 완성
*정보통신법 · 산업융합법(1.17일), 금융혁신법(4.1일),
지역특구법(4.17일), 행정규제기본법(7.17일)

■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해
연내 1,800여 개 행정규제 정비

-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규제는 자동 폐지

■ 현장 건의에 기반한 규제혁신
지속 추진

-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230건의 과제 발굴 · 개선 추진 중)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240건 개선 중)
-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등

→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창출해 신산업 · 신기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주도하는 지역경제 활력

- ◆ 지역 노·사·민·정 간 양보와 타협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제시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마련하고 확산 방안 발표('19.2월)
 - 상생 협약의 기본요소 :
적정 근로조건 합의,
노사관계안정, 고용·투자 확대, 인프라·복지협력 등
- 광주를 시작으로 '19.10월 까지 밀양, 대구, 구미, 강원, 군산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

→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지역이 주도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공정경제가 이끄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 ◆ 누구나 일한 만큼 보상받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정경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 대다수 해소

- 93개 → **4개**(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기준)

■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향상

- 하도급 분야 개선 응답 비율 : 87% → **94%**

■ 상생경제 규모 100조원 돌파

- **100조원** 돌파

→ 공정경제를 확산해 시장경제가 건강한 발전을 이루는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시용실천서』 저자별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분획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fi.or.kr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 박양우

제작협력 : (주)대동기획

인쇄·제본 : (사)중증장애인지원사업자지원협회

발행일 : 2019.12

내 삶을 바꾸는

 **문재인정부
사용설명서**
